

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Contents

2014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국가별, 주제별)

프랑스	3
양육지원	3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5
유아교육·보육 시설	7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13
유아교육·보육 교사	14
 일본	15
양육지원	15
유아교육·보육 제도	20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21
유아교육·보육 시설	26
유아교육·보육 교사	27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30
양육지원	30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33
 독일	40
양육지원	40
유아교육·보육 제도	45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46
유아교육·보육 시설	52
유아교육·보육 교사	53
 북유럽 및 기타	56
유아교육·보육 제도	56
유아교육·보육 시설	57
 [부록] 2014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목록 및 조회 분석	58
1. 연구소 홈페이지 탑재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2. 국가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탑재 수	
3. 최다 조회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1~5순위	
4. 주제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분류	



| 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



2014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국가별, 주제별)

프랑스

● 양육 지원

1. 영유아 자녀 교육분담 보조금 개혁안

사회활동 자유보장안(CLCA)이 2014년 10월 1일자로 영유아 자녀 교육분담 보조금 정책 (PréParE)으로 대체된다. 이 개혁안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법에 근거 하여 2014년 8월 5일에 공표되었다.

사회활동 자유보장안은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던 보조금 제도인데 수혜자의 96.5% 가 여성이었다. 즉, 육아를 위해 보조금을 받으며 사회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여성의 몫이었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보조금 정책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육아에 있어 부모의 균형 잡힌 역할분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자녀를 가진 부부는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의 보조금을 지급 받고, 이 후 추가적으로 다른 한 명이 6개월 동안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자녀 이상을 가진 부모 중 한 명은 3년 동안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한 명이 추가로 6개월을 보장받는다. 이 보조금은 2014년 10월 1일 출생, 혹은 입양된 아이들부터 적용된다.

프랑스 행정부 공식 보도자료 2014년 8월 7일자
기사출처: <http://www.service-public.fr/actualites/003238.html>

2. 둘째 아이부터 혜택을 받는 여성 근로자 양육 보조금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 보조금(Paje)의 탄생은 여성 경제활동 비율의 ‘미미한’ 증가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둘째 아이에서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육아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이 여성의 직업 활동을 유지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 INSEE의 연구에 따르면 둘째 아이부터 부분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 보조금이 생겨나게 된 2004년부터 가장 어린 자녀가 만 2세일 때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1.1%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아주 미약하며, 결국 소득에 따라

여성이 일을 계속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유아 양육 보조금은 여러 가지 지급액을 조정하였다. 우선적으로 새로 태어나거나 입양한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 지원을 늘리도록 했다. 이러한 조정은 기본적인 지급액을 위한 자본의 상한과 지원액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가장 소득이 적은 가정을 기준으로 (연)3500유로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미미한 증가에 머무른 원인으로는 그들의 아이들을 맡길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공공육아시설이 아닌 시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프랑스 일간지 La tribune 인터넷판, 2014년 7월 18일자

기사출처: <http://www.latribune.fr/actualites/economie/france/20140718trib000840576/les-aides-aux-gardes-d-enfant-favorisent-un-peu-lemploi-feminin-a-partir-du-2e-enfant.html>

3. 이혼가정 아동의 ‘교대 거주’(Residence Alternee)

교대 거주지(Residence Alternee) 제도는 이혼가정의 아동이 일주일은 아빠의 집에서, 다음 일주일은 엄마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집에 번갈아 가며 머물러야 하며, 이 때 각각의 부모는 국가로부터 가족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가족정책 법령이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최근 이혼한 부모 중 한 명의 동의 없이 아이의 학교를 바꾸거나 아이의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최대 1만유로(약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에게 같은 비율의 교대 거주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이들은 적어도 6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정신분석가 등의 의견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육아에서의 양성평등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프랑스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L'express 인터넷판, 2014년 5월 21일자

기사출처: http://www.lexpress.fr/actualite/politique/loi-famille-l-assemblee-vote-une-amende-pour-atteinte-a-la-autorite-parentale_1545071.html

●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1. 사회보장제도 : 2015년 가정에 찾아오는 변화

정부는 2015년 7억유로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보장제도와 지원금을 손보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조치들에 대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육아휴직 : 남녀평등법에 의해 육아휴직에 관한 법령은 8월에 이미 개정이 예고되었다. 현재 육아휴직 신청자의 97%가 여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이 요구되었다. 첫째 아이의 경우, 두 부모가 모두 휴직을 신청하면 6개월에서 최대 1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둘째 아이부터는 주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6개월의 휴직을 신청하면 두 부모의 총 육아휴직이 최대 3년까지 보장받는다. 정부는 2015년에 출생하거나 입양된 둘째 아이부터 부모 모두 참여하는 양육을 장려하고, 나아가 이를 법령으로 제정하고자 한다.
- 출산수당 : 2015년 출산수당은 둘째 아이부터, 308유로에서 923유로까지 세 등급으로 분류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정부는 2억5천유로의 예산을 절감할 것이다. 그리고, 영아 육아수당(Paje)은 이제 아이가 태어난 달이 아닌 그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 아이돌보미 보조 : 만 6세 미만 아이들의 부모가 가족수당지원국으로부터 지원받는 돌보미 보조금의 삭감이 시행된다. 대상은 상위 20%의 소득을 가진 부모들이다.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월 87.19유로에서 460.93유로로 구분되었던 현 보조금 수혜 기준에, 가장 소득이 높은 가정에 대한 분류가 하나 더 추가되고 세분화되는 것이다.
- 가족수당 : 현재 자녀가 만 14살이 될 때까지 부모는 월 평균 64.67유로의 가족수당을 받아 왔다. 앞으로는 만 16살까지로 그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2001년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된다. 가족수당지원금은 최상위 계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조정하는(낮추는) 방향으로 변동될 예정이다. 복지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당과, 가정에 피해를 주는 것일 뿐이라는 보수정당들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과연 누가, 얼마나 혜택을 덜 받게 되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 현재까지는 어떻게 지급되었나?
현재까지는 모든 가정이 동일한 주택보조금을 받았다. 소득에 관계없이 두 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한 달에 129.99유로, 세 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296.53유로, 그리고 그 이상일 경우 자녀 한 명 당 166.55유로가 추가적으로 지급되었다.

- 보조금 개정은 누구와 관련되는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대상이 될 것이며, 부모 모두의 수입을 합쳐 월 6,000유로 이상인 가정과 8,000유로 이상인 가정이 기준이 되어 대상이 정해질 것이다. 마리졸 뚜랜 복지부 장관은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는 가정은 전체의 12%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 얼마나 줄어드는가?

두 자녀를 기준으로, 월 6,000유로 이상의 수입을 가진 가정은 기존의 보조금의 절반인 월 65유로 정도로 줄어들고, 월 8,000유로 이상인 가정은 4분의 1인 32유로 정도로 줄어든다.

- 실질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6,000유로 이상의 수입을 가진 가정은 한 달에 65유로, 1.06%의 구매력이 줄어드는 것이고 8,000유로 이상의 수입을 가진 가정은 97.5유로, 즉 12%가 줄어드는 것이다.

프랑스 일간지 20minutes 인터넷판 2014년 9월 30일자

기사출처: <http://www.20minutes.fr/societe/1452083-20140930-securite-sociale-va-changer-familles-2015>

프랑스 메트로 metro news 2014년 10월 27일자

기사출처: <http://www.metronews.fr/info/caf-allocations-familiales-qui-va-perdre-combien-en-2015/mnjA!mha2X4Rp2wQC2/>

2. 왜 육아비용이 2013년보다 증가했나

프랑스의 육아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3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한 지역에서는 베이비시터나 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으로 인한 육아비용 증가율이 6.2%로, 3.5% 증가에 머무른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3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Yoopies 베이비시터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이다. 연간보고서는 지역별 베이비시터들의 시간당 임금 통계를 다루고 있다.

임금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리무진으로 6.64%의 증가율을 보였다. 예상대로 일드프랑스 (파리 근교 포함 수도권 지역)가 8.98유로로 가장 높은 임금을 기록하였고, 그 중에서도 루방 씨엔느 시는 10.01유로에 이른다. 가장 낮은 지역은 8.01유로의 브르타뉴 지방이며 포르뉘 시 베이비시터의 시간당 임금은 7.25유로를 넘지 않았다.

Yoopies의 보고서는 보육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도 포함하고 있는데, 부모의 3분의 1이 한달에 한 번 이상 베이비시터를 부른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 중 4%만이 다른 사람

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장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날은, 새 학기의 시작과 새해, 그리고 발렌타인 성인 축일이다.

1/3 이상의 넘는 부모가 1년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데 1,000 유로 이상 지출한다고 답했으며, 10%의 부모는 100 유로 이하를 지출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렇게 베이비시터의 역할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한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육을 전담하는 비율은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1%의 베이비시터가 한 가정에서 2달을 넘기지 못하였고, 한 가정에서 한해 평균 3.2명의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일간지 La Tribune 인터넷판, 2014년 8월 20일자

기사출처:<http://www.latribune.fr/entreprises-finance/services/20140819trib000845002/pourquoi-faire-garder-son-enfant-coute-plus-cher-qu-en-2013.html>

● ● 유아교육·보육 시설

1. 파리에 문을 연 모든 아이들을 위한 시립 보육원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모두를 위한 첫 시립 보육원이 파리 19구에 문을 열었다. 이는 가장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되는 차별 철폐를 위한 한 걸음이다.

지난 1월 15일 델라노에 파리 시장의 참석하에 문을 연 이 보육원은 총 수용 가능인원이 66명이고, 20명의 (신체적, 정신적, 만성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아동을 수용하였다. 취학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후 2개월부터 만 6살까지의 아이들이 이 보육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상관 없이 모든 파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층계가 없는 단층구조로 설계되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로 기존의 보육원과 같다. 네 명으로 구성된 교사들은 장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교육을 15일 동안 받게 되며, 아이들은 나이와는 별개로 각각의 능력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파리에는 4개의 보육원이 이곳과 같은 시스템을 연구중이다. 그리고 60%의 가까운 파리

지역 보육원은 장애아동들과 만성적 질병을 앓고있는 아이들을 수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Le blog de l'emploi handicap(장애인들의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2014년 1월 27일자
기사출처: <http://www.handicap-job.com/blog/2014/01/27/paris-creche-municipale-enfants-handicapes-et-valides/>

2.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장소

비트리 르 프랑수아 지방의 La Parent'aïse(라 파렁테즈 : ‘부모’와 ‘기쁨, 편안함’을 결합해서 만든 단어. 음은 ‘괄호’라는 뜻의 프랑스어 La Parenthèse와 같다)는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 하모아에 문을 연 시설로서, 어른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특별한 등록이나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생아부터 7살까지의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 뿐만 아니라, 임산부, 조부모 또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곳에는 프랑스 가족수당 지원국에서 파견된 자원봉사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아이와 부모를 위한 이 시설을 만드는데 일조한 마리 조세프 뒤랑은 처음 이 곳이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개선시키되 개입하지는 않는다 » 이것 이 라 파렁테즈의 신조이다. 마리 조세프 뒤랑은 이 시설이 부모에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한다고 교육시키거나 설명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모든 가족 각자의 가치판단과 교육적인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인 사라 무보는 부모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 시설의 규칙들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프랑스 지역신문 L'Union L'Ardennais 인터넷판, 2014 3월 21일자
기사출처: <http://www.lunion.presse.fr/accueil/un-lieu-pour-developper-les-liens-entre-parents-et-enfants-ia0b0n319345>

3. 유치원 시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인터넷에 공개

공공재 구매를 관리 감독하는 OEAP(재경부 산하)에서는, 3살 이하 아이들의 보육시설부터 유치원까지의 시설과 안전용품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문서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 문서는 공공토지를 소유한 단체에 제시하는 내용, 규정 모음, 영유아들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 환경적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시설에 사용된 장비에 따라 구분되어 정리되어 만들어졌다.

프랑스 교육 소식지 WEKA 4월 18일자

기사출처: http://www.weka.fr/actualite/education-thematique_7847/cole-maternelle-un-nouveau-guide-daide-a-la-redaction-des-marches-publics-mis-en-ligne-article_283969/

4. 보르도의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직

2014년 5월, 보르도 지역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찰기구가 설치되었다. 이는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3월 5일 만들어진 법령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이 지역의 모든 육아정책 실행 주체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의장으로는 보르도 4대학의 사회문제 전문가 모니끄 리베이롤-쉬브레나가 선출되었다. 모니끄는 도 의회가 작성하게 될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아동 보호 매뉴얼」을 따라 이 기구를 운영 할 것이며 2018년에는 회의를 거쳐 이 매뉴얼의 수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찰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르도의 아동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다. 그리고 정보의 수집에 머무르지 않고, 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며 분석하는 역할 또한 맡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에 가장 알맞은 방식의 정책을 개발하고, 보르도 의회가 이를 수용하도록 제안한다. 주요 논의사항을 컨퍼런스 개최, 회의 등을 통해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지역은 투표를 통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아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지자체들이 2007년부터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들은 투표를 통해 어떻게 아이들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Sud Ouest 인터넷판, 2014년 5월 26일자

기사출처: <http://www.sudouest.fr/2014/05/24/un-lieu-d-echange-et-d-analyse-1564526-1980.php>

5. 기업을 위한 보육원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하여 알프스-마리팀 지역의 바빌루시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재직

자 보육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바빌루시는 기존 보육원의 정원수를 일정부분 확보하여 각 기업 재직자들에게 보육원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하게 한다. 이러한 방식은 개개인의 근무환경에 따라 유연하고 자유로운 보육원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새로운 보육원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 또한 줄일 수 있게 한다.

일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직장과 보육원의 거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빌루시의 경우, 처음에는 직장과 인접한 보육원을 이용하던 부모들은 점차 시가 제안하는 보육원을 좀 더 이용하는 추세이다.

부모들은 가족수당지원국을 통해 다른 보육원과 동일하게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기업들은 기존 대비 5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 전체로는 비용의 2/3를 절약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보육 지원은 마치 구내 식당과 같은 기업의 공동체적 역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일간지 Varmatin 인터넷판, 2014년 6월 25일자

기사출처: <http://www.varmatin.com/societes-et-collectivites/la-creche-un-plus-pour-l'entreprise.1707150.html>

6.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심 증가

매년 80만명이 출생하고, 만 3세 미만의 아이가 2배 5십만인 프랑스는 현재 어린이집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그 결과 보육의 문제는 언제나 부모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특히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직업 활동에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된다. 유모와 육아보조가 대안으로서 존재하지만, 여전히 70%의 가정에서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을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적은 비용과 더 나은 안전관리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하여 사내 어린이집 시설에 투자 증대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10년 전까지 SBF 120 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2%만이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 시설을 갖추었었지만 현재는 53%에 이른다.

작년 Babilou, les Petits Chaperons Rouges, People & Baby 등의 직장 어린이집이 신축된 것을 계기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어린이집들은 여러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여 운영된다.

근로자 부모들은 시립 어린이집 수준의 비용만을 지불하며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이 50%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보육시설운영비의 80%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다.

2003년 IBM, 로레알, 르노 등 700개 기업의 참여로 만들어진 Babilou 어린이집은 다양한 나 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회사와 가정의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0개에서 30개의 새로운 어린이집이 매년 문을 열고 있고 매년 6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발달은 영유아 보육산업의 직업적 성장 또한 이끌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Le Figaro 2014년 9월 24일자,

기사출처:<http://www.lefigaro.fr/vie-bureau/2014/09/24/09008-20140924ARTFIG00008-les-creches-d-entreprise-seduisent-de-plus-en-plus-d-employeurs.php>

7. 가족수당지원국의 보조금을 받는 크레떼이(Creteil)의 새로운 보육시설

2014년 9월 1일부터 바빌루 그룹의 기업운영 보육시설은 10개월부터 4세까지의 아동 40명을 받고 있다. 밸드마른(Val de Marne)의 가족수당지원국은 이 보육시설 건설에 60만 유로의 건축비용을 지원했고 공익사업통합지원국(PSU) 또한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시립 보육시설과 같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가까운 곳에 훌륭한 시설을 갖게 된 기업의 근로자들은 직장과 가정 모두에 충실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보육시설은 아침 7시 30분부터 19시까지 운영되며 일반, 임시, 긴급 세가지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기업운영 보육시설이 근로자 부모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97%의 부모가 기업운영 보육시설로 인해 편안함을 느낀다고 답하였고, 91%의 워킹맘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데 기업운영 보육시설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81%의 응답자가 현재의 직장을 선택하는 데에 보육시설이 영향을 주었다고 답하였다.

프랑스 파리 근교 지방 신문 94 citoyens 인터넷판 2014년 11월 24일자

기사출처: <http://94.citoyens.com/2014/la-caisse-dallocations-familiales-subventionne-une-nouvelle-creche-a-creteil,24-11-2014.html>

8. 학생부모를 위한 대학의 보육시설

홍보가 미흡하여 그 존재를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많지만, 대학에는 학생부모들을 위한 보육 시설이 있다. 깅, 파리, 리옹, 르루즈(2008년부터), 디종, 그리고 릴의 캠퍼스는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교직원과 교수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는 이 시설은 이용자의 수입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된다. 적계는 20명에서 66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10개월에서 4살까지의 아이들을 위탁할 수 있다. 학기 중에는 매일 운영되며, 개인에 따라 시간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 한 명, 주당 20시간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릴 지역 내 대학 보육시설을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반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주당 2시간에서 20시간을 맡길 수 있다. 학생은 수업이나 자신의 연구시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육시설은 신원과 능력이 보장된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깎 캠퍼스의 경우에는 2개월에서 4살까지의 60명의 아이들을 주 5일 돌보고 있다. 이 곳의 담당자에 따르면,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이 시험 준비 등에 열중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그들의 수입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한 달에 평균 60유로 정도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다.

28세 미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장학금과 같은 제한적 지원금 제도 또한 시행되고 있다. 가족수당지원국과 영유아 육아지원국은 3세까지의 육아 도우미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신분이라는 상황에 맞는 여러 지원들을 통해 학업과 자녀양육의 양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프랑스 교육관련 사이트 digischool 2014년 11월 25일자

기사출처: <http://www.digischool.fr/budget/creches-universite-pour-parents-etudiants-25239.php>

● 유아교육 · 보육 프로그램

1. 유치원에서부터의 성평등 교육

벵상 빼이옹 교육부 장관과 나자 발로 베카셍 여성부 장관은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남녀 평등의 학습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과연 춤은 여자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여자들이 석공이 될 수 있는가?

벵상 빼이옹은 론에 있는 빌뢰르반 유치원을 방문하여, 학업을 훌륭히 마친 여성의 졸업 후 특정 직업을 가지는 것이 금기시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빌뢰르반 유치원은 현재 5개의 학술기관에서 시험중인 평등의 ABC(기초) 교육을 적용할 것이다. 뱅상 빼이옹은 교육이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차이를 존중하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성부 장관 나자 발로 베카셍은 적성 교육이 모든 자기규율에 대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유아의 경우에도 그들이 어떠한 직업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었을 때 갈등을 겪기 때문이다. 장관은 아이들에게 남자 산파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있나요? 여자가 석공이 되는 것이 이상한가요? 등의 질문을 던졌는데, 이러한 질문은 유치원 아이들이 남자 아이가 소꿉놀이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진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교육부는 교육자료로서의 접근을 위해 국립 교육과정평가원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평등의 ABC를 배포한다. 두 장관이 밝힌 이 교육의 목표는 성적인 편견과 관련된 태도에 대해 의식하는 것이다.

벵상 빼이옹은 연구들이 우리가 같은 답안에 대해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에게 다른 점수를 준다는 것과 우리가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일간지 Le Figaro 인터넷판 2014년 1월 13일자

기사출처: <http://www.lefigaro.fr/flash-actu/2014/01/13/97001-20140113FILWWW00446-education--l--egalites-des--sexes--des--la--maternelle.php>

●● 유아교육 · 보육 교사

1. 생 안드레에서 열린 육아도우미 취업설명회

이직, 휴가, 유모의 병가 등 육아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이 때 유용하게, 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육아도우미’다. 한 육아도우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아이들을 TV 앞에 방치하거나 아이들끼리만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우리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배운 여러 방법들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보육시설과는 달리 저녁과 밤시간에도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그 시간에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육아도우미(Assistant maternel)란 무엇인가

육아도우미는 6세 미만의 아이를 4명까지 자신의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직업이다. 그들은 자신을 고용한 부모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는다.

이들은 각 시도의 의회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영유아 보호국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이 인증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모든 조건을 증명시켜준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지의 안전 상태를 점검할 전문가의 직접 방문조사가 필수이며, 지원자들은 영유아 육아 전문가들과 함께 그들의 비전과 직업능력에 대한 면담을 가진다.

이 인증을 받게 되면, 첫 번째 아동을 반기 전에 60시간, 그리고 총 120시간의 정규 교육을 받게 되며 이 교육은 대학 등의 국립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다.

프랑스 북부 지방신문 La voix du nord 인터넷판, 2014 11월 29일자

기사출처: <http://www.lavoixdunord.fr/region/saint-andre-un-job-dating-pour-trouver-son-ia22b129506n2522194>

일 본

양육지원

1. 과장급 이상은 주1회 자택근무, 소비자청 7월부터 도입

일본 소비자청은 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근무하는 ‘텔레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 전원에게 주 1회 자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소비자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약 300명으로 그 중 과장급 이상은 26명인데, 우선은 관리직 전원에게 주 1회 텔레워크를 이용하도록 한 후, 간병이나 양육을 이유로 텔레워크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도 점차적으로 이용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텔레워크를 2008년도까지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도에 출범한 소비자청의 경우는 이 제도가 올 5월에 막 도입된 단계여서 현재 이용 실적은 전무하다. 일본의 성청(省廳) 전체의 텔레워크 이용률도 0.1%에 불과하다.

모리 마사코 저출산·소비자 담당 장관은 20일,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실현,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관료들의 업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회 답변서 작성업무로 인해 ‘텔레워크로는 국회의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라는 차가운 시선도 있어 소비자청이 올 9월 이후 간부급들의 텔레워크를 어느 범위까지 추진, 장려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사히신문 2014년 6월 20일자

기사출처: http://digital.asahi.com/articles/ASG6N56J4G6NUTFL00C.html?iref=comkiji_txt_end_s_kjid_ASG6N56J4G6NUTFL00C

2.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 가정을 방문해 돌봐주는 맞벌이부부 대상 ‘보험’형 보육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방문형 병아보육’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부모끼리 서로 돋는 공제형 및 사용하지 않으면 회비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과 같은 체계도 나타났다.

일본의 공제형 방문형 병아보육은 2005년 도쿄의 NPO법인 플로렌스가 시작했다.

‘아이가 감기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간호를 우선시한 나머지 일자리를 잃는 여성이 많다는 실정을 베이비시터였던 어머니가 이야기해주었다.’ 대표이사인 고마자키 히로 키(34세)는 이러한 상황을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23살에 플로렌스를 창업해 2년 뒤에 도쿄도 주오구, 고토구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은 도쿄 23구 및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등 4개 광역지자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회원은 3천 명에 달한다.

아사히신문 2014년 1월 8일

기사출처: <http://www.asahi.com/articles/ASG175SW1G17PLFA00K.html>

3. 와카야마현, 시정촌과 연계한 부모지원사업

작년 7월, 와카야마현의 2세 아동이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와카야마현은 이달 11일, ‘부모 지원 어프로치 사업’을 올해 안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와카야마현이 각 시정촌(일본의 기초자치단체)과 연계하여 바람직한 부모 자녀 관계 구축을 위한 육아법 등을 연구하는 사업이다. 현(県) 차원에서 시정촌 및 NPO법인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일본 최초’의 육아정책이다.

이는 호주 퀸즈랜드 대학의 임상심리학과 매튜 샌더스 교수가 발표, 현재 세계 25개국에 도입된 ‘트리플P 긍정적인 육아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고 있다.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강의를 듣거나 그룹별로 육아 고민을 공유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역할을 바꿔 연기해보는 방식 등으로 다양한 육아 문제에 대한 대처법을 배운다.

각 지자체는 지금까지 실시해 온 ‘육아가정 방문’과 ‘영유아 건강검진’ 정책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달 말부터는 소규모 강연회를 열어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은 보건사와 보육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 강좌’를 열어 육아가정을 전담해서 지원하는 인재 확보와 이들의 능력향상을 목표로 한다. 지속적인 인적 기반을 정비하여 전반적인 육아 정책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연구, 검증 부분에서는 와카야마현립의대가 협력한다. 작년 학대사건을 조사했던 검증위원회의 야나가와 교수는 “작년 사건을 통해 학대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육아 지원 체

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학대 가능성을 따지기보다 모든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월 12일자 아사히 신문

기사출처: http://digital.asahi.com/articles/ASG9C470PG9CPXLB00F.html?iref=comkiji_txt_end_s_kjid_ASG9C470PG9CPXLB00F

4. 日 에히메 현, 육아 정보를 한눈에. 지역 전용 사이트

마쓰시마시(松山市)는 12월 1일, 육아정보를 한데 모은 인터넷사이트 ‘칸가에루 카페(생각하는 카페)’(<http://kosodate-matsuyama.jp/>)를 신설했다. 육아 관련 행정서비스나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을 계재하는 사이트로 스마트폰 버전도 있다.

마쓰시마시 육아지원과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육아정보를 담당부서별로 나누어 게재했다고 한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꾸려진 프로젝트 팀(자녀를 양육 중에 있는 직원 20명으로 구성)에서 정보가 뒤죽박죽이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전용사이트를 제작하기로 했다.

사이트는 임신·출산, 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 불임, 장애아동, 편부모 가정 등 7개 범주로 분류, 이용 가능한 검진이나 의료비 조성, 아동 클럽 등의 행정서비스를 소개한다. 시 등이 주최하는 이벤트 정보, 시행이 끝난 육아강좌 보고서 등도 게시하고 있다. 향후 민간이 주최하는 이벤트 정보 등도 올려 내용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는 ‘모두 함께 육아에 대해 생각하자’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사이트 담당자는 “이용 가능한 제도를 라이프 스타일별로 보기 쉽게 나누거나 실시간 나들이 정보를 수시로 올리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 2014년 12월 2일자

기사출처: <http://www.asahi.com/articles/ASGD152CGGD1PFIB00K.html>

5. 오사카 자원봉사 협회, 외국인 육아 지원 가이드북 발행

오사카 자원봉사 협회(오사카시 중앙구에 위치)가 ‘다문화 육아 지원 가이드북: 일본어로 전수하는 육아 비법’(A5사이즈 총 84페이지)을 발행했다. 외국인 부모를 지원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비법 등을 담아 외국인 학부모를 배려한 쉬운 일본어 표현법 등을 소개했다.

가이드북은 그림을 곁들여 읽기 쉽게 제작되었다.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 및 일본어 습득 현황, 외국인 학부모와의 교류 사례, 권유 표현, 일본어로 전수하는 육아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쉬운 표현을 쓰자는 방침 하에 ‘열탕’을 ‘뜨거운 목욕물’로 바꾸는 등,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담았다.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만명 이상, 오사카부만 해도 20만명을 넘어, 아이를 낳아 기르는 외국인 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 어머니들을 상담해주는 자체 보건사를 중심으로 ‘육아법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와 같은 상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협회는 2012년 일본어 교실 강사, 지자체 직원, 보육사, 보건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20회를 넘는 회의를 거듭한 끝에 가이드북 2000만부를 발행했다.

한편, 가이드북은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는 오사카 자원봉사 협회 (+81-66809-4901)

마이니치 신문 12월 5일자

기사출처: <http://mainichi.jp/area/osaka/news/20141205ddlk27100305000c.html>

6. “아빠도 육아를 즐기자” 후쿠오카현 ‘아빠 스쿨’ 도입

아빠도 육아에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규슈에서 남성들의 육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 NPO가 이달 10일부터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 등을 대상으로 ‘아빠 스쿨’이라는 강좌를 연다.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노하우나 아버지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아빠 스쿨’은 후쿠오카현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강좌로, 현재 참가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후쿠오카시의 NPO ‘파더링 재팬 규슈(FJQ)’가 운영하는 이 강좌는 총 6회 코스로, 사전 신청제를 기본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강좌 내용은 다채롭다. 온라인 상에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근무시간을 관리, 단축시켜 육아 시간을 늘리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아버지의 시간관리 능력’과 각자의 양육 경험담을 공유하는 ‘아버지 다락방 모임’, 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방법을 소개하는 ‘좋은 그림책 고르는 법, 읽어주는 법’ 등이 대표적이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여성들의 육아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후쿠오카현에 따르면 남

성이 휴일에 가사, 육아를 돋는 시간이 길수록 아이를 둘 이상 낳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한다. 한편, 후쿠오카현 내 육아휴직 취득률은 여성이 89.6%인데 반해, 남성은 0.7%로 매우 낮다.

이에 대해 FJQ의 한 관계자는 ‘육아는 여성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디 즐겁고 뿌듯한 일이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많은 남성들이 꼭 육아에 관한 노하우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설명 했다.

아사히 신문, 2014년 5월 9일자

기사출처: http://digital.asahi.com/articles/ASG5842YTG58TPE00M.html?_requesturl=articles%2FASG5842YTG58TPE00M.htmlamp

7. 후생노동성, 육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사와 육아맨을 표창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남성들을 응원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육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상사를 표창하는 ‘육아보스어워드2014’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남성들을 표창하는 ‘육아맨스 피치대회2014’를 일본 최초로 개최한다.

육아보스란, 성장 자녀를 둔 사원을 이해하고 이들의 육아활동을 지원하는 상사를 말한다. ‘육아보스어워드’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부하 직원의 육아와 일 병행을 배려해주고 이들이 육아 휴직이나 단시간 노동을 하게 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면서도 자신의 일과 생활에 충실한 관리직이다. 남녀 불문하고 기업이나 단체의 추천이 필요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이 수여된다.

한편 육아맨 스피치대회의 응모 자격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남성으로, 예선을 통과한 최종 3인이 스피치를 한 뒤, 우승과 준우승, 3위를 결정짓는다. ‘육아보스어워드’ 표창식과 ‘육아맨스피치대회’ 결승 및 표창식은 다가오는 10월 17일 도쿄도내에서 열린다.

요미우리 신문 2014년 7월 23일자

기사출처: <http://www.yomiuri.co.jp/job/news/20140723-OYT8T50054.html>

● 유아교육·보육 제도

1. 日 스가 관방장관, ‘육아 지원, 예정대로 실시’ 표명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세 인상에 따른 사회보장개혁의 핵심인 ‘어린이·육아지원 신제도’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2015년) 4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내년 10월로 계획하던 소비세 인상시기를 1년 반 보류하면서 발생한 부족재원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세 인상을 통한 사회보장 확충 정책 중 아베 총리가 힘을 쏟고 있는 육아지원정책 등에 한해서는 시행 시기를 미루지 않음으로써 정책약속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있다.

‘어린이·육아지원 신제도’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혹은 두 기관을 통합한 인정어린이원 뿐만 아니라 소규모 보육시설이나 사업장 내(内) 보육 등도 국가 지원대상으로 삼은 제도로 대기아동 해소가 주요 목적이다.

본래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대로 매년 7000억 엔 규모의 재정이 확보될 것이라 예상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미루게 되면서 이 기간 중에 발생한 부족재원은 현재 세수 여유분으로 충당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등의 방안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여성의 활약’을 핵심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점에 입각해, 이러한 방침을 중의원 선거기간 중에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사회보장 확충 정책 중 실행이 불가능한 정책도 있으나 선심성 정책이 아닌 우선 순위에 따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이니치 신문 2014년 11월 19일자

기사출처: <http://mainichi.jp/select/news/20141120k0000m010121000c.html>

2. 日 도쿄 미나토구, 2015년부터 둘째부터 무상 보육 실시

도쿄 미나토구가 20일, 2015년부터 보육시설 보육료를 둘째 자녀부터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육아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는 도쿄 23개구 중 최초의 시도이다.

201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육아지원 신제도’에 맞춰 보육료를 17년 만에 수정한다. 미나토구 주민이라면 첫째 아이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인정어린이원 등에 다닐 경우, 둘째 이후 자녀부터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미나토구에 위치한 인가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다.

현재 미나토구내(内) 인가보육시설 등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약 4,500명에 이르지만 이 중 둘째 이후 자녀는 16%에 불과하다. 때문에 다케이 마사아키(武井雅昭) 미나토구 구장(区長)은 아이를 둘 이상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보육료 상한액도 오르게 된다. 첫째 아이가 3세 미만인 경우, 상한액은 월 5만 7500 엔에서 7만 4700 엔으로 인상된다. 이로 인한 미나토구의 추가 부담금액은 연간 8천만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1월 21일자 아사히 신문

기사출처: http://digital.asahi.com/articles/ASGCN5CTZGCNUTIL01P.html?_requesturl=articles%2FASGCN5CTZGCNUTIL01P.html&iref=comkiji_txt_end_s_kid_ASGCN5CTZGCNUTIL01P

●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1. 새로운 육아지원제도, 재원 연간 4000억 엔 부족

일본정부가 2015년도부터 보육소 등을 확충하는 육아지원 신제도 시행에 앞서 보육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보육사의 처우 개선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매년 약 1조 1000억 엔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신제도에는 세제·사회보장 일체개혁을 통해 소비세에서 연간 7000억 엔을 충당하기로 결정되었으나, 4000억 엔에 달하는 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신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2012년에 통과된 육아지원 3개법과 관련해 보육소 및 인정어린이원 등의 이용정원을 늘리는 ‘양의 확충’에 약 4000억 엔, 직원 처우 및 배치 수 등을 향상시키는 ‘질의 개선’에 약 3000억 엔을 충당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정부가 비용을 재추산해 ‘질의 개선’에 매년 약 7000억 엔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직원급여 인상 및 직원 배치기준

개선 등의 필요경비를 추가한 결과로 당초 상정한 금액을 크게 웃도는 액수이다.

요미우리신문 2014년 2월 13일자

기사출처: <http://www.yomidr.yomiuri.co.jp/page.jsp?id=92939>

2. 하마마쓰시 민간보육소에 100억 엔 조성해 신년도 예산안에 계상

하마마쓰시가 편성작업을 추진중인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서 민간보육소에 대한 각종 보조금에 총액 100억 엔 가량을 충당할 방침을 확정한 사실이 4일 밝혀졌다. 2014년도는 스즈키 시장의 재임 최종년도로 시장선거공약으로 내건 ‘자녀 제일주의’의 총마무리로 육아지원에 예산을 중점배분한다.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약 7% 늘린 금액으로 보육소 5곳의 정비보조 및 인증보육소를 이용하는 보호자 보조 등 각 메뉴의 보조액을 증액해 대기아동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당초 예산안에는 전년도 대비 보육소 2곳이 늘어나 67개 민간보육소(정원 7060명)의 관리운영경비로 약 73억 엔을 계상할 전망이다. 시설정비보조는 신설되는 보육소 3곳과 증축하는 보육소 2곳에 총 7조 9500만 엔을 보조해 정원을 420명 늘릴 계획이다. 시립보육소 22곳(정원 2150명)의 관리운영관련비는 약 11억 엔 가량을 계상한다.

하마마쓰시는 보육소뿐 아니라 방과후아동교실(학동보육)과 유치원 지원 확충도 검토중이다. 15년도에 도입되는 ‘자녀·육아지원 신제도’를 염두에 두고 ‘인정어린이원’으로 이행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도 새로 편성할 방침이다.

하마마쓰시는 작년 4월 기준 인가보육소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대기아동이 269명으로 시즈오카 현에서 가장 많았다. 하마마쓰시는 대기아동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소의 정원증가를 추진하고 있으나 잠재적 희망자가 많아 시설정비가 진행되면 입소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즈오카신문 2014년 2월 5일자

기사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205-00000002-at_s-I22

3. 신 보육제도: 육아지원 줄줄이 축소, 연기

■ 소비세 증세분의 충당분 7071억 엔의 사용처, 정부 원안

11일 일본정부는 2015년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자녀·육아지원제도에서 보육의 내실화를 위해 소비세 증세분에서 충당하는 7071억 엔의 사용처에 대한 원안을 자민당에 제시했다. 약 1조 1000억 엔을 상정하는 소요재원의 약 35%인 4000억 엔 가량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축소 할 수 밖에 없었다. 5% 인상할 예정이었던 보육소 직원의 임금은 3% 인상에 그치는 등 주요 정책은 줄줄이 축소, 연기를 하게 됐다.

신제도는 보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확대’에 재원을 배분한다. 2017년도까지 보육시설의 정원을 40만 명 늘리는 양적 확대에는 예정대로 4068억 엔을 할당할 계획이지만 질적 개선에는 상정했던 6865억 엔에 크게 못 미치는 3003억 엔을 할당한다.

그 결과 현재 보육사 배치기준인 ‘3세아 20명당 1명’을 ‘15명당 1명’으로 개선하기 위한 비용 700억 엔은 당초 방침대로 할당하지만 1, 4, 5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사 증원(총 1261억 엔)은 재원 마련이 안 돼 유보될 전망이다. 보육소 직원의 임금 5% 인상에 할당하는 비용도 당초 예정의 60%인 571억 엔밖에 확보하지 못해 3% 인상에 그친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맡길 곳이 없어지는 ‘초1의 벽’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에는 오후 6시 반 이후에도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모든 ‘방과후 아동클럽’에 상근직원 1명을 배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비상근직원의 쳐우개선 등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부담경감책 확충이 유보되며 주민세 비과세가구의 학용품 등을 전액 보조 해주는 계획도 생활보호가구로 한정하고 보조도 절반에 그친다.

한편 19명 이하 정원의 소규모보육시설에서 보육직원을 기준 이상으로 배치하기 위한 비용 134억 엔과 아동양호시설의 직원배치기준 개선비 222억 엔 등은 전액 할당한다. 내각부는 부족한 재원 약 4000억 엔 가량에 관해 ‘예산편성과정에서 확보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으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마이니치신문 2014년 3월 11일자

기사출처: <http://mainichi.jp/select/news/20140312k0000m010096000c.html>

4. 일본 후생노동성, 육아 지원 기업에 대한 세금우대정책 확충안 검토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달 14일, 육아 정책 지원에 힘쓰는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를 연장 및 확충하는 방안을 내년도 세제개정요망에 넣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추진법을 바탕으로 한 육아지원기업 인증마크 ‘쿠루민’을 취득한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가 내년 3월 말이면 끝나는데다가, 이 마크를 취득한 기업 수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크를 취득한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충시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목적이다.

쿠루민 마크를 취득한 기업은 특정 기간 내에 신축, 재건축된 건물에서 기업 채무의 32%를 면제 받을 수 있고 경영실적이 좋은 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세라는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우대조치가 올해 말을 기점으로 끝나기 때문에 후생노동성이 내년도 세제개정요망에서 쿠루민 세제를 1, 2년 정도 연장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추진법은 일과 양육의 병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 실행하고 남성 육아휴직 취득자 수가 1명 이상, 여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70% 이상 등의 기준을 채운 기업을 ‘육아지원기업’이라 인정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기업은 광고나 상품에 쿠루민 마크를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쿠루민 마크를 취득한 기업은 약 190개에 그친다. 남성의 육아휴직취득이 어렵다는 점과 기업들이 쿠루민 인증으로 얻을 수 있는 세금 우대 조치를 잘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후생노동성 한 관계자는 ‘쿠루민 세제 확충으로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는 기업이 늘면 육아세대의 노동력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세수증대로 이어진다’며 향후 제도를 확충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산케이 신문 2014년 8월 15일자

기사출처: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40815/plc1408151000010-n1.htm>

5. 日 생명보험협회, 여성의 취업지원, 보육소 신설에 조성금 지원

일본의 생명보험협회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보육소를 신설하는 사업자에게 조성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작한다. 올해 총액 3000만 엔의 조성금을 확보, 보육소 한 곳당 개설비용

에 최대 500만 엔을, 비품구입에 최대 50만 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아동 문제를 해소하고 일과 양육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야간이나 연장보육과 같은 ‘특별보육’에 필요한 아동용 침대나 방과후 아동보육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등이 조성 대상이 된다. 협회는 이달 19일 오후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에 조성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종업원의 약 80%가 여성이다. 또한 아베 정권이 성장전략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여성의 활약추진’을 내건 만큼 향후 협회 차원에서 여성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9월 19일자 요미우리 신문

기사출처: <http://www.yomiuri.co.jp/job/news/20140919-OYT8T50005.html>

6. 日 아리무라 여성활약담당상, 인정어린이원 보조금 수정안 표명

유치원과 보육원(일본 어린이집)의 기능을 겸비한 이른바 ‘인정어린이원’을 놓고 일부 사업자들이 보조금 삭감을 이유로 어린이원 인정을 반려하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리무라 하루코 여성활약담당상은 10월 24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예산편성 시 필요 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표명, 보조금 수정 방침을 밝혔다.

인정어린이원은 현재,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를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어린이 육아지원 신(新)제도를 바탕으로 통합, 변경할 계획이다. 지금은 유치원과 보육원 부분을 각각 구분해서 2명분의 원장급여를 보조하고 있으나 이를 1명분으로 삭감하고 원아수가 많은 대규모 어린이원의 원생 1인당 단가를 소규모 어린이원보다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로인해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어린이원의 경우 인증을 반려하고 보육원이나 유치원을 다시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원장의 급여보조나 정원규모에 따른 가산 방법을 다시 수정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新)제도 재원은 소비세를 10%로 올린 단계에서 7천억 엔이 할당되는데 보조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 1) 제 2차 아베내각 출범 이후 새로 만들어진 장관직. 명칭대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는 장관을 말한다.

2) 원래는 인정 어린이원 보조금을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어린이원이 인증을 반려하겠다고 하자, 급여보조 가산방법을 수정하여 다시 인상하기로 함. 그래서 보조금을 올리려면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2014년 10월 24일자 아사히 신문

기사출처: <http://www.asahi.com/articles/ASGBS3H25GBSUTFL004.html>

●● 유아교육·보육 시설

1.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 센다이시가 ‘소규모보육’을 1년 앞당겨 도입

센다이시는 대기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2015년도에 전국 도입을 계획하는 ‘소규모보육’을 1년 앞당겨 이번 달부터 시작했다. 1일 기준 8개 시설(정원 143명)을 열어 89명을 수용했다. 대상인 3세 미만아는 센다이시의 대기아동 수인 659명 중 606명(작년 10월 기준)으로 약 90%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유아를 수용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월까지 6개 시설이 더 운영을 시작해 총 252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보육 정원은 6~19명으로 20명 이상인 인가보육소에 비해 면적 등의 기준도 느슨하기 때문에 빌딩의 공실을 활용한 시설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기아동문제 해결을 서두르는 지자체는 앞당겨 실시할 수 있으며 도쿄도의 12개 시구 등이 실시하고 있고 정부 보조금도 나온다.

센다이시 미야기노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호시 노리코(28세) 씨는 근무지 근처에 있는 아오바구의 소규모보육시설 ‘파티보육원’에 1살짜리 큰 딸을 맡기기 시작했다. 작년 말부터 보육원을 찾는 ‘호카츠(保活)’를 하면서 인가보육소 등 5개 원에 신청서를 넣었지만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곳의 1세아 정원은 전부 꽉 차 들어가지 못했다. 신설된 파티보육원은 실적 이 없고 신제도에 대해 불안감도 느껴 당초 신청을 주저했다고 한다. 그러나 호시 씨는 실제로 이용해보니 ‘원아가 적은 만큼 선생님들이 세심하게 봐준다. 오히려 잘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2세까지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호시씨 같은 경우에는 3세 이후의 보육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는 호카츠(保活)를 재개해야 한다고 한다. 인가보육소 입학 시 기준은 부모의 균무환경 등 보육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포인트이다. 센다이시는 소규모보육 이용자에게 가점을

주는 등 편의 제공을 검토 중이다. 소규모보육의 향후에 대해서도 ‘질 높은 시설을 늘리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마이니치신문 4월 15일자

기사출처: <http://mainichi.jp/select/news/20140416k0000m040013000c.html>

2. 시즈오카시가 인정어린이원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침안과 관련해 시민 의견 모집

시즈오카시는 2015년도부터 시립 유치원·보육소의 인정어린이원 이행 방침안을 공표했다. 이는 일본정부의 자녀·육아 신제도 도입에 따른 조치로 2014년 1월 15일까지 시민의견을 모집한다.

방침안에 따르면 인정어린이원으로 12개 유치원과 45개 보육소가 이행하게 된다. 아동 수가 적은 이가와 유치원과 기요사와 유치원, 우메가시마 보육소와 오오카와 보육소는 소규모보육 사업 시설로 이행한다.

이행 후에는 원칙적으로 유보연계형 교육 및 보육이 실시되는데 몇 년간은 경과조치로 수용 대상아동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즈오카 시는 보육자의 수요조사를 실시중이며 내년도에는 기존 유치원과 보육소의 정원을 설정할 계획이다. 사립 유치원의 동향도 파악해 인근에 여러 인정어린이원이 생길 경우에는 통폐합에 대해서도 검토해 15년도부터 시의 자녀·육아지원사업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시즈오카신문 2014년 1월 1일

기사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101-00000004-at_s-i22

● 유아교육·보육 교사

1. 일본 정부가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을 활용해 ‘준보육사’ 도입을 검토중

일본정부가 보육사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준보육사’제도를 만들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이 보육소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보육소에 입소하지 못하는 대기아동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육사단체의 반발도 예상되어 조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일본정부의 산업경쟁력회의(의장 아베 신조 총리)가 14일에 개최한 ‘고용·인재’의 분과회에서 민간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일본정부가 성장전략을 개정하는 6월에 맞춰 여성의 활약을 추진하는 정책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녀를 보육소에 맡기지 못해 직장 복귀를 포기하는 여성의 아직 많은 상황이며 보육소를 설립해도 보육사가 부족한 점이 현재 심각한 문제이다.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주부는 많지만 보육사 국가자격을 갖추려면 전문지식을 배우고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등 주부에게는 진입장벽이 높다.

분과회는 국가자격 보육사보다 간단한 시험이나 연수로 취득할 수 있는 준보육사라는 민간자격 신설을 제안했다. 전문지식 수준을 낮추는 한편 주부의 육아경험을 중시하는 것이 그 골자다. 지금 현재도 보육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조인력으로 보육소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2007년에 준보육사제도를 검토해 도입을 연기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준보육사가 확대되면 전체 보육사의 임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진 전국보육협의회 등의 업계 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분과회는 여성의 취로활동을 막는 한 요인인 세제 및 연금 등의 제도 재고를 요청했다. 아내가 전업주부일 경우 남편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는 ‘배우자 공제’의 축소 및 폐지가 주된 내용이다. 전업주부가 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3호 피보험자제도’는 존속 여부를 포함해서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육아중인 여성의 재택근무도 할 수 있도록 심야근무의 할증 임금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2014년 3월 14일자
기사출처: http://www.nikkei.com/article/DGXNASFS1402Y_U4A310C1EE8000/

2. 보육사 부족의 원인은 ‘임금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쳐서’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나 보육사로서 일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임금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이 5일 일본의 후생노동성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대기아동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육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보육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유자격자 이른바 ‘잠재보육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자금 측면의 쳐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는 작년 5월 한국의 고용센터에 해당하는 헬로워크에서 구직 서비스를 이용한 잠재보육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8명이 응답해 47.1%의 응답률을 보였다.

보육사로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임금수준이 맞지 않아서’가 47.5%로 가장 많았다

마이니치신문 2014년 1월 5일

출처: <http://mainichi.jp/select/news/20140106k0000m040055000c.html>

3. 나라현, 보육사 확보를 위한 인재 은행 개설

일본 나라현이 취업을 희망하는 보육사와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을 이어주는 이른바 ‘보육사 인재 은행’을 설치, 이달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보육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과 복직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보육 환경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이 인재 은행은 나라현 거주민 중 보육사 자격증을 지닌 사람과 현내 보육시설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무 전문가인 취업지원 코디네이터가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

나라현 육아지원과에 의하면 현재 나라현 내에 보육사로 등록된 사람은 약 만7천 명이라 한다. 그러나 이 중 9천 여명은 결혼, 출산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거나 이직하여 보육 현장을 떠난 상태이다. 이들의 약 30%는 나라현이 작년 가을 실시한 조사에서 ‘다시 보육사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보육시설의 70%는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 이 조사에서 노동자는 파트타임 근무를 희망하는 반면 시설 측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등 양측 입장이 다르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인재 은행은 보육사와 시설 측의 의견을 상세히 파악하고 절충안을 마련하거나 응급 조치나 보육실기 연수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취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사히 신문 2014년 7월 17일자

기사출처: http://digital.asahi.com/articles/ASG7B42CHG7BPOMB006.html?iref=comkiji_txt_end_s_kjid_ASG7B42CHG7BPOMB006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양육 지원

1. [호주] 직장 내 양성 불평등 여전, 기업 이사직 남성이 76% 차지

직장 내 양성평등 구현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자유국민연립의 총선 공약이었던 유급출산휴가제(Paid Parental Leave Scheme)와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남녀의 고용률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관리직을 담당하는 여성은 4분의 1에 불과하며 남성과 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보다 평균 24.7%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호주 내 고용주 중 탄력 근무제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비율은 13.6%, 양성 평등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 비율은 7.1%에 불과하다.

보고서에서 조사한 11,000명의 고용주 중 노동당 전 정부 시절의 유급출산휴가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를 보완해서 출산여성을 챙겨주고 있는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애봇 총리의 유급출산휴가제도는 산모에게 6개월 간 급여 전액을 보전해 주되 상한액을 5만 달러로 제한할 예정이다. 총 550억 달러가 소요될 이 제도를 위해 연방정부는 대기업들로부터 1.5%의 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연방정부의 이번 보고서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호주의 여성 노동 참여율을 142개국 중 51위라고 발표하고, 이번 달 브리즈번에서 개최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오는 2025년까지 여성의 노동 참여를 1억 명까지 늘릴 것을 선언한 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연방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 발표와 함께 남성 중심적인 직장 문화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직장 내 양성평등위원회 헬렌 콘웨이 위원장은 “최초로 우리는 기준선을 마련하게 됐다. 이 보고서는 서로 비교해보고, 표준화시키고, 다방면의 자료에 기초한 투명한 보고서”라며 “이 자료를 공개해 각 기관이 참고자료로 삼는다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콘웨이 위원장은 이 보고서의 핵심이 “모든 직책에서 직장 내 승진길이 여성에게는 막혀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성의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5%임에도 풀타임 고용률은 35.8%에 불과 ▲ 남성이 이사직 76.24%, 이사회 의장 88.12%, 최고경영자 83% 차지 ▲ 남녀 급여 차이 기본급 20%, 수당포함 총 급여 25%에 달해 ▲ 수당포함 총 급여의 남녀차이가 가장 심한 분야는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36.1%), 차이가 가장 적은 분야는 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9.6%).

총리실 보좌관을 맡고 있는 미케엘리아 캐시(Michaelia Cash) 상원의원은 이번 보고서가 직장 내 양성평등에 있어 개선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캐시 의원은 “연방정부는 제대로 된 유급휴가제도를 직장에 정착시키고 보육제도를 검토해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동아 2014년 11월 27일자

기사출처: <http://www.hoju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25>

2. [호주] 2주간 근무시간 24시간 이하 워킹맘의 보육 보조금 수령 제한 법안 제안

2주 기준 총 근무시간이나 수업시간이 24시간 이하인 취업부모 및 학생신분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저렴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안 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2주간 24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두며 6명 중 1명의 취업모가 이에 영향을 받아 저렴한 보육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해질 수 있다.

호주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권고한 활동 테스트(activity test)는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의 육아 보조금 수령을 막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Goodstart Early Learning(호주 최대 보육 서비스 제공자) 은 이 테스트가 수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 취업부모가 이용 중인 저렴한 보육서비스 이용의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주 연방정부가 생산성 위원회의 권고대로 2주간 총 근무시간이나 학업시간이 24시간에 못 미치는 부모의 보육 보조금 수급을 제한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현재 호주에서는 부모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주당 24시간의 보육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Herald Sun 2014년 9월 7일자

기사출처: <http://www.heraldsun.com.au/news/activity-test-working-mums-may-lose-cheap-childcare/story-fni0fiyv-1227050844102?nk=1833f232acf14d035a8dd27582aa1aad>

3. [호주] 개혁을 통한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장애아동 지원금 확대

일련의 개혁의 성과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지방·벽지 거주 장애아동이 지역사회 유아교육기관(community preschool)을 이용할 시에 받는 유아학비 지원금이 증액 될 예정이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유아교육기관 장애 지원 프로그램(Preschool Disability Support Program)을 통해 뉴사우스웨일스 주 내의 유아교육기관에 사용 가능한 예산이 연 2백만 달러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총 1,7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에이드리언 피콜리(Adrian Piccoli) 교육부 장관은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통한 교육은 아동의 발달단계상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장애아동에게까지 확대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아동 포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모든 지역사회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 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지방·벽지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교육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피콜리 장관은 “장애아동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끔 지원금이 증액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원금은 장애아동이 유아교육기관에 다닐 때 필요한 원조의 정도에 따라 3 단계로 구분하여 지급 된다. 보통 수준의 활동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는 하루에 45달러, 성인으로부터 상당 한 수준의 활동보조를 받아야 아동은 90달러, 집중 지원을 요하는 아동은 120 달러로 차등지원 하는 것이다.

새로 시행될 유아교육기관 장애 지원 프로그램(Preschool Disability Support Program)은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두 개의 지역사회 유아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Supporting Children with Additional Needs와 Intervention Support Program programs)을 대체한다.

Northern Star 2014년 8월 17일자

기사출처: <http://www.northernstar.com.au/news/Reforms-more-funding-for-NSW-children-disability/2354222/>

4. [뉴질랜드] 확대가족 아동 지원을 위한 특별 지원금

뉴질랜드 코로만델 반도의 스캇 심슨(Scott Simpson) 의원은 확대가족 아동이 최대한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적 양여금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 코로만델 반도에는 여러 복잡한 이유로 인하여 아동이 조부모를 비롯한 다른 친척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스캇 심슨 의원은 확대가족 아동이 좋은 양육을 받아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Extraordinary Care Fund 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며, 별도의 수업료가 필요한 운동, 음악 혹은 아동이 큰 재능과 잠재력을 보이는 모든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확대가족 아동은 이 기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약 12,7000명의 아이들이 부모 외의 가족 및 친지에 의해 양육되고 있으며, 확대가족 아동 특별 양여금 신청 안내문이 아이의 보호자에게 발송되게 된다. 신청자격 및 방법 등 자세한 설명은 <http://www.workandincome.govt.nz/individuals/brochures/extraordinary-care-fund.html>에서도 볼 수 있다.

New Zealand National Party, 2014년 7월 25일자 보도자료
기사출처: <http://www.scoop.co.nz/stories/PA1407/S00515/helping-kids-thrive-with-extraordinary-care-grants.htm>

●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1. [호주] 보육임금기금(childcare wage fund) 중 300만불을 직원교육비용으로 전환

보육교사의 임금 인상을 위한 300만불의 기금이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자신의 재량과 여가 활동에 사용되도록 센터장에게 전달 될 전망이다. 본래 정해진 사용기한인 내년 중반까지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서두르거나 혹은 기한이 지나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교육부 차관 Sussan Ley는 새로운 전문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보다 유연한 타임라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The Australian 2014년 3월 4일자
기사출처: <http://www.theaustralian.com.au/national-affairs/m-childcare-wage-fund-diverted-to-staff-training/story-fn59niix-1226844143395#>

2. [뉴질랜드] 노동당, \$ 60 베이비플랜 추진

뉴질랜드의 노동당은 보편적 가족 수당(universal family benefit)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이 같은 정책을 다시 시행할 계획이 있음을 발표했다.

노동당의 아동분야 대변인과 교육분야 대변인은 중앙 침례 유아센터와 어린이 교육 포럼에 참여하여, 연간 소득이 \$ 150,000 미만인 가정에 한하여 일주일에 60달러씩을 부모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동 전문가 자문 그룹은, 아동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가족 수당과 같은 보편적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권장하지만, 정부가 모든 아이들에게 지불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노동당은 또한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의료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법도 찾고 있다고 말하였다.

The New Zealand Herald 2014년 4월 24일자

기사출처: http://www.nzherald.co.nz/wanganui-chronicle/news/article.cfm?c_id=1503426&objectid=11243800

3. [호주] 보육예산 어린이 1인기준 연간 \$ 6000 삭감

보육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매년 소득이 \$ 135,000인 가정의 경우 2017년까지 연간 \$ 6000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Early Childhood Australia 의 최고 경영자(CEO) 사만다 페이지는 정부 지출의 상당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의 총액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향후 3년간 보육 리베이트의 최대 수준을 계속 동결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가족이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임계 값 동결을 적용했다. 보조금 예산이 삭감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보육센터에 보내지 못하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교육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The Australian, 2014년 5월 24일자

기사출처: <http://www.theaustralian.com.au/national-affairs/budget-2014/per-child-worse-off-a-year/story-fnmbxsh3-1226927454251>

4. [뉴질랜드] 부모들을 위한 2014년 예산

정부는 올해 선거에 앞서 2014년 예산을 부모들에게 공개하였다. 오늘의 예산에 포함된 것은 유급육아휴직(PPL, Paid Parental Leave), 일반의(GP, General Practitioner) 방문, 유아 교육과 부모의 세금 크레딧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이다.

부모를 대상으로 가장 큰 새로운 지출은 향후 4년 동안 1억7천1백80만달러의 비용으로, 14주에서 18주로 부모의 유급 휴가를 확장하는 것이다. 2015년 4월부터 16주 추가 확장과 2016년 4월부터는 18주로 더 길어질 것이다. 좀더 많은 새로운 부모들은 PPL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 인터넷신문 3 News, 2014년 5월 15일자

기사출처: <http://www.3news.co.nz/Budget-2014-More-for-parents/tbid/1607/articleID/344333/Default.aspx>

5. [호주] 호주정부, 유치원 보조금 1년 연장 지급 결정

내년에도 4세 취학 전 아동을 둔 가정은 유치원(preschool) 학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수잔 레이 연방 교육부 차관(Assistant Education Minister)은 연방정부가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학비를 내년까지 연장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총 15시간의 유치원 학비 중 10시간 학비는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시간은 연방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토니 애봇 연방정부는 총 4억600만 달러의 예산을 4세 아동의 교육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모든 유치원이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치원 선정은 각 주와 준주 정부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주간 종일 유아센터(long-day-care centres)에서 운영하는 유치원과 같은 시설들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잔 레이 차관은 연방정부가 전국파트너십협약(The national partnership arrangements)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치원 수를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계획안은 내년 2015년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의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호주 교육노조(Education Union)의 빅토리아 대표 메러디스 피스 씨는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학비 지원계획에 대해 환영하지만 1년만 연장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미 수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밝혀지고 있으며,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기교육 지원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호주 동아 2014년 9월 12일자

기사출처: <http://www.hoju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34>

6. [호주] 보육수당 수급대상 확대로 예상되는 논란: 보모 vs 입주가정부

토니 애벗(Tony Abbott) 총리는 2012년 호주 자유당 대표 시절 소위 “여자문제”라고 불리던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다. 총리의 “여자문제”란 여성에게 인기가 없는 정치인이라는 것이었고, 적어도 정치 논객 사이에서는 여성 표심을 얻지 못하는 정치인으로 평가 받는 인물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타개책으로 토니 애벗 총리는 개별적으로 보모를 고용해 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다. 보육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아동 수(수요)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수용 가능한 아동 수(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초래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를 정부가 인지하고 있음을 여성 유권자에게 알리며, 보육수당 수혜자의 범위를 보모 등을 고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가정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보육수당 수급대상 확대 계획은 그의 이미지 쇄신에 도움을 주었으며, 2012년 3월에는 “우먼파워가 국가 경제에 공헌하는 가치”를 강조하는 매우 고무적인 연설을 준비하여 그의 계획을 보다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는 연설 중 “가능한 많은 여성이 사회의 비주류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기보다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 복직해서 직장생활을 할 때 느끼는 고충을 정확히 짚어주었다. 어린이집이 6시 정각이면 문을 닫아 6시 이후에는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곤란함을 느끼는 워킹맘의 심정, 즉 자녀를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6시 이후에는 퇴근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 커리어 발전에 제약을 받는 고충을 이해해주는 연설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혼여성들이 “사회의 비주류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담당하며, 대부분 여성들이 출산 후 자신의 일터로 복직하는 대신 저숙련 일자리를 찾아 일과 육아를 병행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회의 비주류에서 별로 중요치 않은 저숙련·저임금의 일자리라고 해서 근무시간이 탄력적이고 육아를 너끈히 병행할 만한 시간여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 문제다.

집에서 개별적으로 보모 등을 고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방법은 6시면 문을 닫는 어린이집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시간 제약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부족하여 모든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일반적인 사무직의 근무형태가 아닌 야간 교대근무 또는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나 2012년 3월 토니 애벗 총리의 매우 고무적이었던 연설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육아시설에 자녀를 위탁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모 등을 고용하여 돌보는 부모는 보육 수당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오는 10월 31일 호주 생산성 위원회(The Productivity Commission)는 가정에서 자녀를 보육하는 부모에게도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입주가정부가 아닌 보모를 고용한 가정만 수급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자녀 돌봄을 위해 고용한 대상이 누구든 간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돌보미를 고용하는 방식의 보육이라는 것은 동일하다. 그리고, 보모가 아닌 입주가정부를 고용한 부모 또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이다. 그렇다면 보모를 고용한 부모에게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물론, 입주가정부가 전문적인 보모만큼 아이를 돌볼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일 것이다.

The Canberra Times 2014년 10월 11자

기사출처: <http://www.canberratimes.com.au/comment/ct-editorial/childcare-rebate-split-looms-over-nannies-and-au-pairs-20141011-114qhi.html>

7. 애봇 총리, 유급출산휴가 개혁안 후퇴 예고

토니 애봇 연방 총리가 고소득 가구 대상 보육 보조금에 대해 자산조사(mean test) 검토를 통한 변화를 시사했다.

애봇 총리는 내년에 시행될 ‘가족’ 패키지 정책의 일환으로 유모 고용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부문에 대해서 유급 출산휴가제도(paid parental leave scheme) 대상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봇 총리는 연방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의 관대함에 우려를 표한 의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유급 출산휴가제도에 변화를 시사했다. 하지만 개편된 유급 출산휴가 제도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인 상원의원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애봇 총리는 “가족들에게 진정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저렴한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유급 출산휴가제도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애봇 총리와 장관들은 지난 10월 보고받은 보육 및 유아 교육에 관한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보고서를 검토하며 여름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조 호커 연방 재무장관은 “보육 시스템이 맞벌이 가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 여성이 있는 가족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소득 활동을 기반으로 한 자산조사를 통해 3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구에 2주 동안 100시간의 보육 보조금 지급을 30% 수준으로 제한 할 것을 제안했다. 현 제도 하에서는 자녀당 매년 7500달러, 보육 비용의 50%까지 환급된다.

자산조사를 통해 얻은 차액 수입은 보육의 가용성을 확대하고 유모와 보육 직원들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애봇 총리의 입장은 “선택 범위”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여성의 실질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적절한 유급 출산휴가제도를 제공할 것을 약속 하며 “중요한 것은 유급출산휴가가 호주의 어머니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이며 특히 사회적 참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어머니들에게 옳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의 변경 가능성은 선거 이후 두 번째 제기된 것으로 당초 최대 7만5000달러까지 지

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4월 최대 5만달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예산문제로 인해 더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전임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유급출산휴가는 18주 동안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일 때는 제외된다.

이번 변화 예고는 의회 내 야당과 반대파들의 비판 제기를 완전히 막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의원들은 계획 변화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히며 애봇 총리가 평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빌 쇼튼 노동당 대표는 애봇 총리의 발표가 “공약 파기(signature broken promise)”를 의미한다며 애봇 총리가 자신의 공약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당초 자유국민연립당의 공약이었던 유급출산휴가 정책은 3000개 대기업으로부터 1.5%의 추가부담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호주동아 2014년 12월 11일자

기사출처: <http://www.hoju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41>

8. [뉴질랜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져오는 결과

Hekia Parata 교육장관은 뉴질랜드 아동들이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유아교육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한 새로운 수치를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유아교육(ECE)의 참여율은 2013년 12월말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에 95.7%가 증가하였다. 마오리, 파시피키아 어린이들의 참여도도 평균 이상으로 증가되었는데 이에 Parata 교육장관은 “이런 증가는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와 교육부 및 조기교육 태스크 포스의 맞춤형 접근 방식으로서 마오리, 파시피카 사회의 매우 긍정적인 반응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년기 아이들의 발전과 교육은 생산성과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2016년 ECE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의 98%가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정부는 NCEA(학업성취도 국립인증서) 레벨2에 대한 더 나은 공공서비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Scoop 2014년 2월 20일자

기사출처: <http://www.scoop.co.nz/stories/PA1402/S00267/investment-in-early-childhood-education-gets-results.htm>

독일

양육 지원

1. 슈베직 여성가족부 장관, 부모지원금 개정안(Elterngeldreform) 소개

독일 여성가족부 슈베직 장관은(Manuela Schwesig, 사민당 소속) 수정된 형태의 엘터른겔트*(부모지원금)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들이 태어난 후 직장으로 다시 일찍 복귀하려는 부모들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부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4개월에서 28개월로 늘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모들의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 부부들의 상황은 바뀌고 있으며, 옛날처럼 아이를 낳게 되면 직장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다.” 슈베직 장관은 ‘부모지원금 플러스’라고(Elterngeld Plus) 불리는 개정된 정책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 부모지원금은 최대 28개월 동안 지원될 것이다. 부모지원금은 자녀들이 태어난 후 직업이 없을 때 받는 보조지원금의 절반 정도의 액수로 지원될 예정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 개정된 지원금에 대한 추가적 비용을 약 1억유로로 측정하였다.

개정 전의 부모지원금 정책은 부모들의 출산 이전 소득에 따라 최대 14개월 동안 매달 300에서 1800 유로 사이의 돈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개정된 부모지원금은 직장을 다니며 동시에 그들의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부모들에 초점을 맞춰 그들에게 더 긴 시간 동안 지원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지원 정책은 갓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가 28개월간 좀 더 풍족한 자녀들과의 시간을 원할 경우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게 된다. 이번 부모지원금 개정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 엘터른겔트(부모지원금)

출산 후 아기로 인해 부모의 경제활동이 지장을 받을 경우, 즉 휴직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간 동안 포기한 소득을 지원해주는 보조금. 독일어로 Eltern은 부모라는 뜻이며, 엘터른겔트(Elterngeld)는 부모가 되는 것을 도와주는 돈, 즉, 부모지원금이라는 의미이다.

2006년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독일정부가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꺼낸 카드. 부모 두 사람에게 최대 14개월간 출산 이전 소득의 67%, 월 최소 300유로(약 45만원)에서 최대 1800유로(약 270만원)까지, 14개월 누적금액 기준 총 25,200유로(약 3천8백만원)까지 지원. 14개월은 부모 두 사람이 협의해서 나누어 쓸 수 있게 되어있다.

타계스샤우 독일 공영 방송 뉴스(Tagesschau.de) 2014년 3월 21일자
기사출처: <http://www.tagesschau.de/inland/eltern geld-plus104.html>

2. 독일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부성휴가는 근로자인 부모가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 육아 휴직의 일부이다. 부성휴가는 아버지가 아이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러한 부성휴기가 법적으로 따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소위 “육아휴직” 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부성휴가”라는 단어는 사실 독일에서 의미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으며, 약 3년간의 육아 휴직을 어머니뿐 만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자녀의 아버지나 또는 부모 양측이 모두 휴직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으로, 부모 양측 모두가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총 3년이며, 부모 양측이 3년을 각각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

자녀수당은 14개월까지 지불되며, 보통 급여의 65-68%가 지급되지만 최대 1800유로까지 지급된다. 또한 이 부성휴가기간 동안 직업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신청자격은, 유급직장을 가지고 주 거소가 독일인 아버지(풀타임/파트타임, 계약직/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와 무관)이며, 아버지는 한 가정에서 자녀들과 같이 거주해야 하며, 입양자녀, 조카들 또는 손자의 양육을 위한 부성휴가를 신청도 가능하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부성휴가 종료 후에는 사용자는 원래의 직장으로 회귀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웹사이트(<http://seismart.de/>) 2014년 4월 12일자
기사출처: http://seismart.de/urlaub/der-vaterschaftsurlaub-voraussetzungen-dauer-beantragung-tipps-uvm-_384.html

3. 가족정책의 성과

독일 국회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을 이유로 직장을 쉬게 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녀수당 플러스 제도를 승인하였다

2007년에 도입된 자녀수당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들이 감수해야 하는 임금 손실의 일부를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제도로서 이 자녀수당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부부가 동시에 두 달 이상 자녀의 교육에 헌신하는 경우라면, 장기간 동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도 아이의 출생 후 바로, 시간제 근로라도 직장으로 귀환하기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경직되고 제한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복지부장관 마뉴엘라 쉬베시흐(Manuella Schwesig)는 6월 4일 수요일 연방 국회에서 채택된 자녀수당(플러스)을 변경하였습니다: 새 규범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수당을 지금까지 누렸던 기간의 2배 이상 길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파트너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간제 근로자로 최소 4개월 동안, 주당 25~30시간 일하는 경우, 각자 추가적으로 자녀수당플러스를 4개월 연장 수령할 수 있다.

독일에서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가족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쉬베시흐(Schwesig) 장관에 따르면, 육아를 동반하는 가족을 위한 법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현재 40시간을 32 시간으로 단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어타게스쉬피겔 2014년 6월4일자

기사출처: <http://www.tagesspiegel.de/meinung/elterngeldplus-eine-familienpolitische-errungenschaft/9989690.html>

4. 엄마들의 장기휴가

보육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남성의 78%는 육아휴직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휴직기간은 보통 2달이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아버지의 약 14%가 9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반면 보육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거의 모든 어머니들은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내년 여름부터 일명 ‘파트너 보너스’라고 불리는 보육수당의 신설 덕분에 보육수당 및 육아휴직이 더 유연해 질 전망이다. 출산 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부모들에게도 혜택이 돌아 가게 되고, 수령 가능 기간도 현재 14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연장된다. 부모가 육아를 위해 동시에 시간제 작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육수당은 28개월까지 지급된다. 아버지가 근무시간을 줄이고 육아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어머니의 출산 후 경력단절 기간을 줄이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 가능해진다. 현재는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해까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2015년 7월 1일부터 자녀가 만 8세 되는 년도 까지 2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디벨트 2014년 11월 9일자

기사출처: <http://www.welt.de/print/wams/politik/article134144639/Muetter-machen-lange-Pause.htm>

5. 제4차 하르츠법 개정에 따른 편부모 가정 아동 지원 축소 예상

하르츠법(Hartz)은 독일의 장기실업 복지정책의 하나로 초과되는 독일의 복지시스템 비용 축소를 위한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004년부터 실업보험 수급기간 단축과 수급액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4차 하르츠법(Hartz-IV)^o 도입되었다.

독일 내 한 부모 가정의 40%가 제4차 하르츠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여성 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금액 삭감의 영향을 받게 된다.

독일 연방 정부에서는 제4차 하르츠법의 개정을 서둘러서 입법화 하려고 준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편부모 가정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만약 이혼가정의 아이가 주양육자인 부모의 집 이 아닌 다른 부모집에서 주말을 보내게 될 때, 이 아동에 대한 지원규모가 축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부모 가족협회(VAMV)에서는 이를 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개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다.

올해 초 진행되었던 베르텔스만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제4차 하르츠법 개정에 영향을 받게 될 아동이 속한 가정의 40%가 실업급여(Hartz-IV)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말에 다른 부모 측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다른 부모의 집에 머무는 시간만큼 공급되는 지원금액이 감액되는 것이다.

지난해 드레스덴의 사회법원에서는 한 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보육수당 감액을 거부한 판결이 있었다. 아이가 주양육자가 아닌 부모와 하루를 보낸다고 해도 월 보육수당의 1/30에 해당하는 절감효과는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의류 구입비, 생활비 등은 여전히 필수 지원품목으로 지원금이 감액됨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결문에 밝힌 바 있다. 2011년 가정법원에서도 유사한 판례가 존재한다. 법원에서는 교제비용을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할 수 있는 “비정형적인 추가요구사항”으로 보았던 것이다.

한 부모 가족협회(VAMV)에서는 지원금액 감액에 대해 “정당한 권리의 간소화 과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동으로 하여금 “생계(지원금)와 주양육자가 아닌 다른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독일 정부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꾹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거의 합의된 상황이며 현재 법안은 계류 중이다. 늦어도 내년 봄 이후 연방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융에벨트 2014년 8월 19일자

기사출처: <http://www.jungewelt.de/2014/08-19/040.php>

6. 마누엘라 슈베직 여성가족부 장관, 주 32시간 근무제 강경한 입장 표명

마누엘라 슈베직 여성가족부 장관, 주 32시간 근무제 강경한 입장 표명: 육아가정에게 주 32시간 근무제 및 육아보조금 지원 제안

독일 여성가족부 장관 마누엘라 슈베직(Manuela Schwesig, 사민당 소속)은 기존의 주 40시간 근무제도에서 육아가 있을시 주 32시간 근무제로 권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가능성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녀는 지난 일요일(1.12.2014) ARD 방송에서(ARD: 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연방공화국 제1공영방송) 기업의 고용주와 노동조합과 함께 주 32시간 근무제가 어떻게 가능 할 것인지, 특히 육아가 있는 가족들에게 힘든 이 시기에 근무시간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 해보고 싶다고 전하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일과 가정 사이에서 양자택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녀는 주 32시간 근무제에 대해 반대한 독일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기민당 소속)의 입장에 대해서는 모든 토론이 항상 논쟁과 싸움으로 번져서 안된다며 의연하게 뜻을 전했다.

그녀는 주 32시간 근무제를 국민 의회의 임기를 떠나 장기적으로 멀리 봐야하는 건이라고 했으며 감소된 근무시간으로 인한 부족한 임금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대변인 슈테펜 자이베르트(Steffen Seibert)는 지난 금요일, 장관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마누엘라 슈베직 장관은 또한 ARD 방송에서 크고 많은 여러가지 사회적 이슈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기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며 현재까지 독일 사회가 토론을 해왔던 최저임금제와 육아보조금 그리고 여성할당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전했다.

육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시간을 줄여야만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부모들을 위해 주 32시간 근무제와 육아보조금을 정부해서 지원하여 이들을 차별받지 않게 해야 한다. 한편 독일정부는 육아가 있는 직장인들이 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무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권리를 과거 인정한 바 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Frankfurt Algemeine Zeitung) 2014년 1월 13일자
기사출처: <http://www.faz.net/aktuell/politik/familienarbeitszeit-schweisig-will-nicht-locker-lassen-12749229.html>

● 유아교육·보육 제도

1. 독일 부페탈 시의 새로운 “베이비웰컴패키지”

이미 작년 말까지 새롭게 부모가 된 젊은이들은 출산 후 “엘터른베글라이트북”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부페탈 시는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부페탈에서 출산”이라는 이름으로 베이비웰컴패키지를 만들었다.

보육료, 양육비용, 생활비지원에 대한 정보 및 긴급전화번호가 필요하거나 유치원 및 탁아소 등록이 필요한 경우 베이비웰컴패키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색의 예비엄마책자(U-노트), 예방접종책 및 마더패스(mother pass)를 삽입할 수 있는 수첩도 무료로 제공된다.

베이비웰컴패키지 구성의 두 번째 부분은 임신책자이다. 전에는 없었던 제도로, 목적은 “올바른정보를 바르게 전달하자”라는 것이다. 임신책자는 복지부, 산부인과 및 조산소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건강 검진, 영양공급 및 출산 병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소아과 의사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발행되었던 책자에는 이러한 변경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아이들의 건강, 예방, 예방 접종 및 응급계획뿐 만 아니라, 산전 클래스, 아기들의 수영 및 놀이 그룹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베스트도이춰자이퉁 2014년 5월 13일자

기사출처: <http://www.wz-newsline.de/lokales/wuppertal/stadt-schnuert-ein-neues-begruessungspaket-fuer-babys-1.1635496>

●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1. U3플랜의 확장: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독일 노르트라인 라인란드베스트팔렌(NRW) 주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U3 플랜의(Under 3-Years Plan)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주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U3 플랜 확장이 주요 목표임을 밝히며 어린이에게 투자하는 것이 미래의 투자하는 것이라 전하였다.

■ U3플랜이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독일 연방 정부의 택아시설확대법은 3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택아소의 수요관리정책의 개발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 정부가 참여한 공동정상회담에서, 2013년 수요관리정책의 택아율 목표수치를 35%로 설정하였다. 이는 라인란드베스트팔렌 주에 상주하는 전체 3세미만 아동의 32%에 해당한다. 연방 정부는 U3플랜을 위한 투자 및 운영 비용의 3 분의 1을 부담하고, 3 분의 2는 주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U3-플랜 위원회(Task Force)를 구성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들 및 현장책임자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 U3플랜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U3 플랜에 대한 법적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투자 촉진을

위하여 총 10억 유로의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플랜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총 6억 800만 유로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제공하였다. 2010 여름 이후에 4억 4천만 유로가 추가로 유입될 예정이다. 또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복지국에 운영 자금 및 U3 플랜 투자자금의 보조금형태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2014 년 말까지 약 4억8천8백만 유로가 제공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U3플랜의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전되고 있다.

독일웹사이트(<http://www.mfkjks.nrw.de>) 2014년 6월 4일자
기사출처: <http://www.mfkjks.nrw.de/kinder-und-jugend/betreuung-fuer-unter-dreijaehrige/>

2. 보육수당 수령을 위한 기나긴 대기행렬

독일에서는 현재 보육수당 지급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이 원인중의 하나가 연방정부의 담당사무소 축소와 전자서류업무 도입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 및 이에 따른 육아수당 신청증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3년 이래로 뉘른베르크 소재 연방 노동기구가 102개의 가족수당 담당사무국을 14개의 부서로 축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육수당 대기행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연방 담당청에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품질개선”을 이유로 전자서류를 동시에 도입하고 있는데 그 결과, 신규 신청하는 일부 부모들에게 상당한 혼잡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전역의 부모들이 184유로의 보육수당 수령을 위해 한달 이상 대기상태에 있다. 이 금액은 뉘른베르크에 위치한 거대관청(대략 11만명의 공무원이 근무)에서 가족지원수당으로, 소득에 무관하게,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 지불되는 금액이다. 특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가 심한 편인데, 최대 80,000쌍의 부모가 1주일 이상 대기해야 하며, 이 중에 일부는 실업수당 수령자도 포함된다.

연방정부의 구조 조정 외에 기타EU 국가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의 보육수당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이 또한 이러한 혼잡과 관련이 있다. 2012년 유럽 사법 재판소(ECJ)는, 독일에 세금을 납부하는 여타 노동자와 동일하게 외국인노동자도 보육수당신청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자녀들이 본국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아래로, 엄청난 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연방기관에 신규로 신청을 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신문에 따르면

이 신청 수치는 대략 30,000에 달한다. 이러한 계절노동자의 급격한 신청수 증가에 따라, 독일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가족수당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설명이다.

슈투트가르트신문, 2014년 5월 14일자

기사출처: <http://www.stuttgarter-zeitung.de/inhalt.pannen-bei-den-familienkassen-langes-warten-auf-das-kindergeld.2e459ff8-990e-4610-8cc0-0ae5e2c36c6e.html>

3. 보육비 분쟁

기민당/사민당 주정부 지출이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클렌부르크-포풀멘(Mecklenburg-Vorpommern)과 튜링겐(Thuringen) 그리고 작센안할트(Saxony-Anhalt) 주에서는 종일반 유치원 기초지원금(연간 1283유로) 지원금액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수 법정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비르지트 해세(사민당) 사회부장관은 이에 대해 육아정책의 성공을 비방하는 선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연간 지원금을 70%까지 증액했으며, 그 금액은 1억1천4백만 유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간 종일반 보육료 기준, 100유로를 감액하였고, 이를 위해 매년 주정부 예산 중 2천3백만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립 시와 군 또는 도시 외 지역과 일부 지자체 및 자선단체 등에 보육 지원 금액이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해세 장관이 예로 들고 있는 평균 지원금액의 증가는, 지원대상 아동 수 증가속도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메클렌부르크 포풀멘 주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3683유로에서 2012년도 3459유로로 지원금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녹색당이 요청한 유치원 재정지원정책의 검증요청은 연합주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민당과 사민당에 의해 거절된 상황이다.

디벨트(<http://www.welt.de/>)2014년 10월 16일자

기사출처: <http://www.welt.de/regionales/mecklenburg-vorpommern/article133354528/Streit-um-Kita-Finanzierung-in-MV.html>

4. 급여 증액 대신 세금 없는 보육수당을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고용주에게 재정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금이 없다.

급여 인상만이 해답은 아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원 할 수 있는데 이 지급액이 급여 항목으로 지불되는 경우 소득세가 없다고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 세무사 협회가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고용인은 본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는 급여의 개별 계정으로 남게 된다.

이를 증빙하는 경우, 보육수당 또한 세금 없이 수령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미혼 부부(부부이지만,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 독일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음)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용된 부모 측이 아닌 다른 부모 측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세금 감면은 유치원과 유사기관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학교유치원, 보육시설과 탁아소 및 기숙학교와 같은 곳으로 의무교육연령의 아이들을 수용하지 않는 기관이라면 가능하다. 또한 시설들은 아이들의 주거 및 관리에 적합해야 한다. 각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가정부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보육되는 경우 세금감면 대상이 아니다.

중부독일신문 2014년 12월 1일자

기사출처: [http://www.mz-web.de/ratgeber/statt-gehaltserhoehung---geld-fuer-kinderbetreuung
-steuerfrei,20641324,29208536.html](http://www.mz-web.de/ratgeber/statt-gehaltserhoehung---geld-fuer-kinderbetreuung-steuerfrei,20641324,29208536.html)

5.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는 함부르크 유치원협회

이번 주 금요일,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라는 시위의 뜻으로 150개의 유치원이 “12시 5분전”에 문을 닫을 예정이다. 지난 수요일 밤, 정부 사회복지 관계자와 보육협회는, 기독사민당 지부장인 안드레아스 드레셀씨가 참석한 자리에서 계약위원회를 열어, 유치원에 더 나은 품질을 보장하는 “기본 협정”에 합의했다고 한다. 단계별 계획을 보면, 2019년 까지 모든 유아원에서 교사 대 아동 배정 비율을 1대 4로 축소하며, 2025년까지 모든 유치원은 1대 10의 비율로 낮춘다고 한다. 여기에 총 1억 1천만 유로에서 1억2천만 유로의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함부르크는 서독 주정부 중 보육비율이 최악이라 유치원의 보육비율은 오래 전부터, 선거 운동에 많이 사용되는 주제다. 몇 주 전 기독사민당(SPD) 복지담당 의원인 데트레프 셀레씨는 500명의 유치원지도자들의 항의 편지를 받고,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 언급하면서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11월 중순, 기독사민당 지부장인 안드레아스 드레셀씨는 이러한 내용에 반하는 신청을 했다. 그 내용은 선거 후에 18개월 미만 아동들의 교사 대 유아비율을 10% 정도 개선 시킨다는 내용이다. 복지단체인 함부르크 SOAL은 “동종 요법 투여”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독일기독연합(CDU), 녹색당 그리고 링케(좌측연합)는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교육자들이 요구하는 1:4 정도로 개선시킬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기독사민당(SPD) 입장에서는 “기본협정”으로 큰 성과를 올린 것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재정 수입의 일부를 재 할당하는 것만으로 유치원협회를 설득했기 때문이다. 보육 예산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조정되는데, 2014년 3.27%였으며 금액으로는 20만 유로에 해당된다. 약 1000개에 달하는 유아교육기관들은 이중의 0.5%를 다른 것을 포기하는 대신,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재 할당하기로 했다.

우선 2015년 4월 1일부터 24개월 미만 아동의 교사 대 학생비율을 10% 개선하며, 유치원협회와 시에서 각각 50%, 금액으로는 2백5십만 유로를 부담하기로 했다. 두 번째 단계로, 2017년 8월까지 3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며, 이때 시에서는 4백만 유로를 유치원협회에서는 312만 유로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9년 8월까지 1:4 비율을 맞추기로 하였고 3세 이상 6세 미만 아동을 위한 비율개선 준비 및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은 2025년까지 개정하기로 하였다.

유치원협회는 300~400백만 유로를 시는 대략 800만 유로를 각출해야 되는 상황이다. 드레셀씨와 셀레씨는 전체 지출액의 절반이 연방정부에서 지급되며, 보육지원금의 재할당이나 신규 보상지원책에 의해 지급 되는 것이다.

타즈 2014년 12월 11일자
기사출처: <http://www.taz.de/!151156/>

6. 독일 혜센 주의 등골 휘는 유치원비

독일 혜센주 켈크하임에 위치한 한 가정의 상황이다. 부부의 직업은 각각 은행원(남편),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변호사(아내)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형편임에도 부부는 두 살짜리 아들의 유치원비 때문에 “한계상황”이라고 말한다.

이 가족이 아들의 유치원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총 10,710유로. 매월 원비로 810유로, 아침과 점심식사 및 간식비로 82.5유로를 지불하고 있으며, 아이는 오전 7:15까지 등원하여 오후 4:45에 하원하는 종일반에 다닌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 살 된 딸의 유치원 비용으로 매달 283유로가 필요하다. 즉, 매달 가구 소득에서 두 자녀의 유치원 비용으로만 약 1,175유로가 드는 셈이다. 연간 비용을 계산하면 거의 소형차 한 대 가격이 나온다. 이 부부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 그나마 감당이 되는 편이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자녀를 격일제로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도 있다.

하지만, 일부 이웃 지역에서는 유치원비가 켈크하임 지역의 약 1/4 밖에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접한 술추바흐(Sulzbach) 와 프랑크푸르트 에서는 식비 제외, 최대 216 유로만 부모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켈크하임은 지난해부터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켈크하임은 지난 3-4년 동안 보육센터의 확장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으며 약 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했다. 그 비용이 현재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된 혜센 주의 아동보육지원법(KiföG)은 2014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에 CDU /FDP(기독민주당/사회당 연합정부) 정부에서 개정되었다. 스테판 그뤼트너(Grüttner)(CDU) 사회복지부 장관은 개정된 아동보육지원법에 따라 아동복지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기관 당 보육아동의 수와 같은 최소유지기준을 12명 이하로 유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노베르트 알텐캄프 바트조텐암타우누스 시장은 이러한 최소유지기준이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유치원비의 비용 및 요금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켈크하임 지역의 학부모 그룹들은 유치원비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내년부터 지원금을 현재 총 유치원비의 1/3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이 증액되면 부모들은 한 달에 약 200유로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즉, 내년부터 유치원비로 매년 10,710유로 대신에 8,310유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여전히 소형차 가격으로 부모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는 높은 가격이다.

* 참고 <보육비가 높은 지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해 온 월별 유치원비(보육시간이 최대인 경우 기준, 식사 및 간식비 제외)

Kelkheim(Main-Taunus) 켈크하임(마인-타우누스)	810 유로
Hofheim(Main-Taunus) 호프하임(마인-타우누스)	710 유로
Bad Soden(Main-Taunus) 바드조덴(마인-타우누스)	700 유로
Eppertshausen(Darmst.-D.) 에페르츠하우젠(담슈타트)	550 유로
Büttelborn(Groß-Gerau) 뷰텔보른(그로스-게라우)	529 유로
Lollar(Groß-Gerau) 롤라(기센)	511 유로
Seeheim-Jug.(Darmst.-D.) 제하임(담슈타트)	500 유로
Schwalbach(Main-Taunus) 쉬발바흐(마인-타우누스)	500 유로

해센온라인(<http://www.hr-online.de/>)2014년 9월 16일자
기사출처: http://www.hr-online.de/website/rubriken/nachrichten/indexhessen34938.jsp?rubrik=36082&key=standard_document_52961783

● 유아교육·보육 시설

1.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위탁 교육시간 증가세

3세 미만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2014년 3월 기준, 독일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주당 37.6 시간에 이른다. 연방 통계청이 밝힌 자료

에 따르면, 3세 미만 아동의 56 %가 주당 35시간의 교육계약을 했으며, 28 %는 25~35시간, 그리고 16 %가 25 시간 미만이었다. 2012년 이래로 주당 유치원 교육시간은 평균 약 30분 가량 늘어난 것으로 2012년 당시 평균보육시간은 37.1시간 이었다.

독일 연방 중, 자를란트 주의 부모들의 평균 유치원 위탁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주당 45시간으로 2년 전의 평균은 43.3시간이었다. 아이들의 유치원 위탁시간이 평균적으로 가장 짧은 곳은 바이에른 지방으로 현재 주당 31.5 시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바이에른 지방은 근래에 평균이상의 급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이래로 1시간 증가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3월 1일 현재, 661,965명의 3세 미만 아동들이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이 연령대 아동의 약 3분의 2정도가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급속한 증가세의 원인은 새로운 법률제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지난 해 8월 이후, 만 1세 이상의 유아의 위탁보장에 대한 법적 권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 후, 점차적으로 위탁 교육의 질적 문제로 중점적인 화제가 높겨가고 있으며 최근의 몇몇 연구는 특히 교사 대 어린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슈피겔온라인(<http://www.spiegel.de/>) 2014년 9월 16일자
기사출처: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kita-betreuungszeiten-fuer-kinder-werden-immer-laenger-a-991879.html>

● 유아교육·보육 교사

1.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유아 보육시설의 인력부족이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흔히 발견되는 상황이다. 독일 내 다수의 어린이집에서 적용하고 있는 직원채용 공식은 교사 대 원생 적정 비율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지역별 차이도 심각하다.

독일 베르텔스만 재단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연방법 차원에서 어린이집 보육의 질에 대한 기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베르텔스만 재단은,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교사 1인당

3명 이하, 3세 이상의 경우 교사 1인당 7.5명 이하의 아동을 담당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모든 취학 전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러한 기준은 어린이집 관련 독일 연방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베르텔스만 재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질은 개선을 요하는 수준이다. 그 동안 어린이집의 양적 팽창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현재 독일 내 어린이집 수는 충분해졌지만, 이제는 보육의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관련 법이 제정 될 필요가 있다.

베르텔스만 재단의 “각 주별 유아교육 모니터링”(“State by State: Monitoring Early Childhood Education”)은 매년 연방정부와 지자체 산하 통계기관에서 집계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관련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로서, 베르텔스만 재단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분석하며, 지난 6년간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적정 비율은 주 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동부와 서부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독일 서부의 경우 평균 1:3.8, 동부의 경우는 평균 1:6.3이다. 실제로, 독일 서부 브레멘주(Bremen)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Baden-Württemberg)에 위치한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평균 3명(브레멘 1:3.2, 바덴뷔르템베르크 1:3.3)으로 베르텔스만 재단의 권고치인 1:3에 가장 근접하다. 하지만, 동부 작센안할트주(Saxony-Anhalt)의 3세 미만 어린이집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는 평균 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세 이상 아동 대상 어린이집도 상황은 비슷하다. 독일 서부 지역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9.1인 반면 동부는 1:12.7로 집계되었다. 마찬가지로 브레멘주(1:7.7)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1:8)가 권고치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으며, 최하위는 1:14.9를 기록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Mecklenburg-Western Pomerania)가 차지했다.

하지만 현실은 숫자로 보여지는 격차보다 더 심각하다. 교사가 아동을 돌보는데 할애 가능한 시간은 전체 업무시간 중 75% 밖에 되지 않아, 교사 1인당 실제로 담당 해야 하는 아동 수는 동부지역의 경우 최소 8명, 서부 지역의 경우 최소 5명인 셈이다. 교사들은 팀 회의, 전문성 개발, 동료교사의 휴직/휴가 발생시 대체 근무 등으로 근무시간의 25%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르텔스만 재단의 인력채용 권고기준이 독일 전역의 어린이집에 의무 적용되게 되면, 120,000 명의 유아교육전문인력의 추가적 고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5십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현재 인건비인 약 140억 유로 대비 총 인건비가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독일의 주정부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 이렇게 큰 규모의 지출을 할 형편이 못 된다. 베르텔스만 재단이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여 일관성 있는 기준을 세우고, 연방정부의 지원금액 또한 해당 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하지만, 모든 아동은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양질의 유아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 투자가 될 것이다.

독일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보도자료, 2014년 7월 25일
기사출처: http://www.bertelsmann-stiftung.de/cps/rde/xchg/SID-81A7E205-98A44315/bst_engl/hs.xsl/nachrichten_121762.htm

북유럽 및 기타

● 유아교육·보육 제도

1. [벨기에]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의 무상정책은 곧 시행되는가?

벨기에 정부는 입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현재, 신생아부터 4세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원 무상화를 고려하고 있다.

연립내각의 정책 계획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보육기관의 무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러한 약속은 유아·청소년 교육부 장관인 끌로드 매쉬를 통해 다시 기사화 되었다. 장관은 “정책의 시작은 1세부터 4세 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원의 무상화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은 무상화가 기회 균등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좋은 보육원을 더 자주 찾게 되는 아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좋은 보육원은 무상화됨으로써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보육원을 단지 아이를 맡기는 곳이 아니다. 보육원은 아이들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곳이다.”

“예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상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약속을 할 시기가 아니다. 가족에 대한 국가 보조금과 국가예산에 관련된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정부의 계획은 “보육시설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발전해야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보육원의 수를 위해서 막대한 민간 차원의 노력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들의 질적인 노력과 교육과정에도 주목할 것이다” 민간 보육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공립 보육원에 대한 관심 만큼이나 중요하다.

벨기에 일간지 L'essentiel 인터넷판 2014년 1월 14일자
기사출처: <http://www.lessentiel.lu/fr/news/luxembourg/story/20467200>

●● 유아교육·보육 시설

1.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노르웨이식 자연유치원 도입

아일랜드 최초의 숲 유치원이 설립된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 유치원 그룹인 “Park Academy Childcare(파크 아카데미 차일드케어)”는 노르웨이의 야외 유치원에서 영감을 받았다.

노르웨이의 야외 유치원은 아일랜드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으며, 아일랜드 정부 및 학부모들도 숲 유치원이라는 컨셉트에 주목하고 있다.

아일랜드 최초의 자연 유치원 설립을 위해 파크 아카데미는 4개월 전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노르웨이의 숲 유치원인 “Lille Frøbel”를 답사한 바 있다. 아일랜드의 숲 유치원은 아직 정식 개원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파크 아카데미 산하 8개의 유치원에서만 하루 몇 시간씩 원아들을 보내 놀게 하고 있다. 자연 유치원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

Park Academy Childcare 「Nature Kindergarten」

기사출처: <http://www.parkchildcare.ie/the-park-academy-nature-kindergarten-killruddery-house.html>

[부록] 2014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목록 및 조회 분석

● 부록 1. 연구소 홈페이지 탑재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부록)

〈총 탑재 동향 정보: 64편('14.12.26 기준)〉

번호	국가	제 목	등록일	조회수
1	프랑스	유치원에서부터의 성평등 교육	'14.02.07	361
2	일본	아이가 갑자기 아플 경우 가정을 방문해 돌봐주는 맞벌이 부부 대상 '보험'형 보육	'14.02.07	415
3	일본	보육사 부족의 원인은 '임금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쳐서'	'14.02.07	402
4	일본	시즈오카시가 인정어린이원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침안과 관련해 시민 의견 모집	'14.02.07	343
5	독일	마누엘라 슈베직 여성가족부 장관, 주 32시간 근무제 강경한 입장 표명	'14.02.07	462
6	벨기에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의 무상정책은 곧 시행되는가?	'14.02.07	372
7	프랑스	파리에 문을 연 모든 아이들을 위한 시립 보육원	'14.03.12	402
8	일본	하마마쓰시 민간보육소에 100억 엔 조성해 신년도 예산안에 계상	'14.03.12	322
9	일본	새로운 육아지원제도, 재원 연간 4000억 엔 부족	'14.03.12	319
10	뉴질랜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져오는 결과	'14.03.12	452
11	프랑스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장소	'14.04.07	438
12	일본	신 보육제도: 육아지원 출출이 축소, 연기	'14.04.07	340
13	일본	일본 정부가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을 활용해 '준보육사' 도입을 검토중	'14.04.07	332
14	호주	보육임금기금(childcare wage fund) 중 300만불을 직원교육 비용으로 전환	'14.04.07	355
15	독일	슈베직 여성가족부 장관, 부모지원금 개정안(Eltnergeldreform) 소개	'14.04.07	345
16	프랑스	유치원 시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인터넷에 공개	'14.05.09	539
17	일본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 센다이시가 '소규모보육'을 1년 앞당겨 도입	'14.05.09	454

번호	국가	제 목	등록일	조회수
18	뉴질랜드	노동당, \$ 60 베이비플랜 추진	'14.05.09	286
19	독일	독일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14.05.09	343
20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노르웨이식 자연유치원 도입	'14.05.09	456
21	프랑스	이혼가정 아동의 ‘교대 거주’(Residence Alternee)	'14.06.12	478
22	프랑스	보르도의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직	'14.06.12	305
23	일본	“아빠도 육아를 즐기자” 후쿠오카현 ‘아빠 스쿨’ 도입	'14.06.12	440
24	뉴질랜드	부모들을 위한 2014년 예산	'14.06.12	271
25	호주	보육예산 어린이 1인기준 연간 \$ 6000 삭감	'14.06.12	270
26	독일	독일 부페탈 시의 새로운 “베이비웰컴파키지”	'14.06.12	276
27	프랑스	기업을 위한 보육원	'14.07.10	304
28	일본	과장급 이상은 주1회 재택근무, 소비자청 7월부터 도입	'14.07.10	289
29	독일	U3플랜의 확장: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4.07.10	296
30	독일	기족정책의 성과	'14.07.10	271
31	프랑스	둘째 아이부터 혜택을 받는 여성 근로자 양육 보조금	'14.08.11	166
32	일본	후생노동성, 육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사와 육아맨을 표창	'14.08.11	173
33	일본	나라현, 보육사 확보를 위한 인재 은행 개설	'14.08.11	144
34	뉴질랜드	확대가족 아동 지원을 위한 특별 지원금	'14.08.11	235
35	독일	보육수당 수령을 위한 기나긴 대기행렬	'14.08.11	270
36	독일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14.08.12	286
37	프랑스	왜 육아비용이 2013년보다 증가했나	'14.09.12	199
38	프랑스	영유아 자녀 교육분담 보조금 개혁안	'14.09.12	186
39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 육아 지원 기업에 대한 세금우대정책 확충 안 검토	'14.09.12	132
40	호주	개혁을 통한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장애아동 지원금 확대	'14.09.12	120
41	독일	제4차 하르츠법 개정에 따른 편부모 가정 아동 지원 축소 예상	'14.09.12	160
42	프랑스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심 증가	'14.10.06	179
43	일본	日 생명보험협회, 여성의 취업지원, 보육소 신설에 보조금 지원	'14.10.06	130

번호	국가	제 목	등록일	조회수
44	일본	와카야마현, 시정촌과 연계한 부모지원사업	'14.10.06	173
45	호주	호주정부, 유치원 보조금 1년 연장 지급 결정	'14.10.06	76
46	호주	2주간 근무시간 24시간 이하 워킹맘의 보육보조금 수령 제한 법안 제안	'14.10.06	92
47	독일	독일 헤센 주의 등골 훠는 유치원비	'14.10.06	106
48	독일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위탁 교육시간 증가세	'14.10.06	105
49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2015년 가정에 찾아오는 변화	'14.11.18	146
50	일본	日 아리무라 여성활약담당상, 인정어린이원 보조금 수정안 표명	'14.11.18	85
51	호주	보육수당 수급대상 확대로 예상되는 논란: 보모 vs 입주가 정부	'14.11.18	60
52	독일	보육비분쟁	'14.11.18	106
53	프랑스	가족수당지원국의 보조금을 받는 크레떼이(Creteil)의 새로운 보육시설	'14.12.19	5
54	일본	日 스가 관방장관, '육아 지원, 예정대로 실시' 표명	'14.12.19	2
55	일본	日 도쿄 미나토구, 2015년부터 둘째부터 무상 보육 실시	'14.12.19	7
56	호주	직장 내 양성 불평등 여전, 기업 이사직 남성이 76% 차지	'14.12.19	9
57	독일	엄마들의 장기휴가	'14.12.19	8
58	프랑스	학생부모를 위한 대학의 보육시설	'14.12.24	2
59	프랑스	생 앤드레에서 열린 육아 도우미 취업설명회	'14.12.24	4
60	일본	日 에히메 현, 육아 정보를 한눈에. 지역 전용 사이트	'14.12.24	1
61	일본	오사카 자원봉사 협회, 외국인 육아 지원 가이드북 발행	'14.12.24	2
62	호주	애봇 총리, 유급출산휴가 개혁안 후퇴 예고	'14.12.24	7
63	독일	급여 증액 대신 세금 없는 보육수당을	'14.12.24	4
64	독일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는 함부르크 유치원협회	'14.12.24	6

● 부록 2. 국가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텁재 수

국가	템재 정보 수
합계	64
프랑스	15
일본	20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12
독일	15
북유럽 및 기타	2

● 부록 3. 최다 조회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1~5순위

순위	국가	제목	조회수
1	프랑스	유치원 시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인터넷에 공개	539
2	프랑스	이혼가정 아동의 '교대 거주'(Residence Alternee)	478
3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노르웨이식 자연유치원 도입	456
4	일본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 센다이시가 '소규모보육'을 1년 앞당겨 도입	454
5	뉴질랜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져오는 결과	452

● 부록 4. 주제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분류

주제	국가별 해당 주제 수				
양육 지원	프랑스 : 3	일본 : 7	오세아니아 : 4	독일 : 6	
유아교육·보육 제도		일본 : 2		독일 : 1	기타 : 1
유아교육·보육 재정 및 비용	프랑스 : 2	일본 : 6	오세아니아 : 8	독일 : 6	
유아교육·보육 시설	프랑스 : 8	일본 : 2		독일 : 1	기타 : 1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프랑스 : 1				
유아교육·보육 교사	프랑스 : 1	일본 : 3		독일 : 1	
합계	15	20	12	15	2

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70-7728-72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